

2026
10

since 1990 | vol. 431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nara.kdi.re.kr

나라경제

Interview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Issue

집이 있어도
집이 없습니다

Now

내가 산
이것의 의미

Special

2027년
나라살림



ISSN 1227-8033 9 771227 803002 10

2027년 나라살림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확충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
히트펌프 보급 5배 확대
폐자원 핵심광물 재활용
지식재산 기반 청년창업 성장 지원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소형 달착륙선 개발(R&D)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지원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R&D)
성실실패·위기기업의 재도전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R&D)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 R&D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제조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R&D)
폴스택 AI 팩토리 및 제조 AI 모델 R&D
K-로봇생태계 고도화 R&D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
AIDC 소부장·클라우드 R&D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최초 정부출연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지역필수의료 AI 모델 개발(R&D)
농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구축
땅콩·애플망고 등 농작물준보험 신설
농업분야 피지컬 AX 프로젝트
K-GIM AX 수출전략기지 구축
공동영농 활성화로 농업 효율화
임업현장 재해위험 저감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5극 3특 성장엔진 사업화 지원
수변구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5극 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R&D)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신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거점 국립대병원 특화육성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교통취약지·시간대 자율주행 교통 지원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
메가 관광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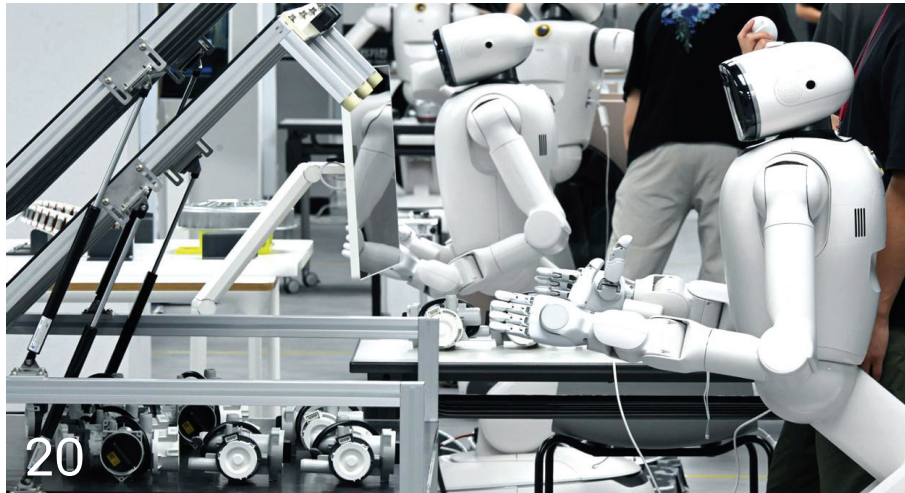
장애인 유·청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공무원 AI 마스터십 과정 운영
인공지능 외교 강화
만화·웹툰 시나리오 창작연습소 조성
국내기업 청년 해외동포 인턴십
K-문화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
공직자 AI 온라인 실습형 교육 패키지
국가유산 스테이(K-Heritage) 조성
2028 G20 의장국
실시간 물가 제공 알뜰소비앱 구축
지역문화 성장생태계 구축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성장양극화 대응 산 '모두의 성장'실용외교

K-민생 지킴 대출
우리아이 자립펀드
코로나 피해 특별 채무조정
아이맞이(출산) 지원금
미취업 청년 기회자금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대학창업 교육기반 고도화
학교밖 경력선지능 청소년 정신건강 제고
돌봄로봇 보급 및 실증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청년 첫 경력 프로젝트(인턴학기)
AI 재도약 대학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지원
보편형 임대주택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충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보건의료 AI 데이터 허브 운영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자살취약지구 안전 개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강화
해양경찰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첨단 소방로봇 도입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노후공장 자동화산화기 설치 지원
화재·폭발사고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
AI 기반 스마트 교정행정
인터폴 마약대응 TF 운영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스토킹 신고접수 시 GPS 장치 탐지 지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군용 군집드론 연구개발 및 소형 공격드론 구매
군용 다목적로봇 구매
부서관 단기복무지원금
병사단체상해보험
공군 작전 AI 인프라 고도화
AI 활용 군주둔지 CCTV 고도화
비전투 민간아웃소싱
마약류 중독자 재발방지 지원
해외공급망 투자 강화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공장창고 화재 실태조사

평화 및
국민 안전
강화



2027년 나라살림

총론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10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총력
김영현 기획예산처 예산소통협력과장

재정경제부

잠재성장률 반등과 12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
박경찬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와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14
대도약 이끈다
전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장

행정안전부

AI로 행정 혁신하고 16
지역 주도 성장의 토대 마련
김동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책임 강화하는 18
농정 대전환 달성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산업통상부

제조 AI 전환과 20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에 역점
손용하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보건복지부

국민 목숨 살리는 22
사회안전메트 더 두텁게 깐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 성장의 24
기회로... 전력, 용수, 녹색 전환에 투자
송용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고용노동부

청년, 양극화 완화, 26
안전한 일터에 집중 투자
김태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부

해양수도권을 28
초광역 경제권으로 본격 육성
임창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 사다리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 30
지역 상권, 소상공인에 확산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운용담당관

집이 있어도 집이 없습니다

도입

환기는커녕 목숨도 앓아... 38
재개발 등으로 점점
밀려나는 주거취약계층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인포그래픽

판잣집·여관 등에 사는 39
주거취약가구 약 55만,
5년 새 11.2% 증가
『나라경제』 편집실

인터뷰

“주거지원, 이제 제대로 된 40
법을 위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이동현 홀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해외사례

자립 준비를 기다리기보다 42
집부터 제공하는 유럽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 현장

‘밑바닥 사정’ 잘 아는 43
민간과 협업해 현장 파악하고
주거복지센터 확충도
허남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모두를 위한 도시는 있다』 저자

제언

집-서비스-운영체계 44
결합된 새로운 주거복지로
하성규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특별인터뷰

“기존 데이터 제대로 활용해 32
국가데이터 경쟁력 확보할 것”
양은주 『나라경제』 편집장

내가 산 이것의 의미

도입

올해 당신도 여기에 54
지갑을 열었나요?...
2026년 소비트렌드의 세 가지 장면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리커버리노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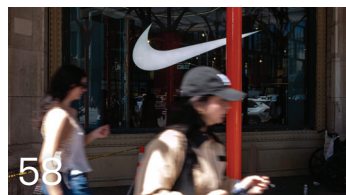
쉬는 것도 자기관리... 56
‘회복’에 지갑 여는 2030
권용훈 한국경제 유통산업부 기자

인터뷰

“세상 모든 모난 것들의 57
고유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수진 맥파이엔타이거 마케터 겸
모난장 총괄

브랜드 신뢰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58
AI 초개인화 시대를 건너는 방법
황성걸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산업미술대학원 원장



경제정책해설

유휴 국유지 활용해 청년기숙사 공급한다 60

강경구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모두가 책임 주체... 62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윤리원칙 확정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양기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AI는 행정을, 64 사람은 구직 상담을... 고용센터 30년 만에 바뀐다

이병성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세계는 지금

EU 66 높아진 유럽 식탁의 문턱,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면

조은지 주벨기에EU대사관 겸
주NATO대표부 농무관



ASIA 69 부상하는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홍콩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책임연구원

칼럼

쓸모없음의 쓸모 45 달리는 고시원 안에서 책 읽는 나를 상상한다

김중혁 소설가

K인사이트 46 AI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방향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전문가 기고 48 150년 전 조선의 개화와 척사의 교훈, AI 시대 우리에게 다시 묻다

김의택 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

임정욱이 만난 혁신기업가 50 김미희 빅크 대표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해 글로벌 엔터테크 1위가 될 겁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오늘도 똑똑한 금융생활 52 수익률보다 오래가는 경제 공부

이현 중앙일보 기자

밥 한 그릇의 위로 72 독일 빵에 버터를 발라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74 말레이시아가 단순한 아세안시장이 아닌 이유

문진욱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국제개발협력 이슈톡 76 세르비아, 공공서비스 AI 혁신의 답 한국에서 찾는다

유지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연구원



강양구의 과학 토크 78 빙하가 무너진 날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AI 트렌드 따라잡기 80 세계로봇대회 개최한 중국에서 피지컬 AI의 현실을 확인하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로드리고의 여행 한 페이지 82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만나는 고독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시평 86 머신 이코노미 시대 필수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 발행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발행인
김세직 KDI 원장
- 편집인
김후진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 편집주간
이용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실장
-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김의택 혁신정책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연웅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박인정 다자경제기구과장
행정안전부 김수경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연경 기획혁신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조혜윤 홍보담당관
산업통상부 주원석 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박영식 기획조정담당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염정섭 녹색전환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태연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소성환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임창현 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진수웅 기획총괄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박귀식 혁신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임경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최성규 정책홍보팀장
- 편집간사
김선정 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실 연구원

- 편집장
양은주
- 취재·편집기자
오성록, 이강선, 황현성, 정서현
- 감수
이재열
- 발행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ISSN
1227-8033 10
-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e-mail
nara@kdi.re.kr
- 발행일
2026년 9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37권 10호(통권 431호)
-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 기사문의
044-550-4646
- 디자인·인쇄
텍스토
- 사진
아유림 스튜디오
- 표지 디자인
김보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읽고 난 소감, 제안 등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nara@kdi.re.kr)로 보내주세요.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편엽서에 의견을 적어 다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세 분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나라경제팀
- 9월호 당첨자
이수영(대전 유성구)
이지훈(부산 해운대구)
조현주(충북 진천군)

정기구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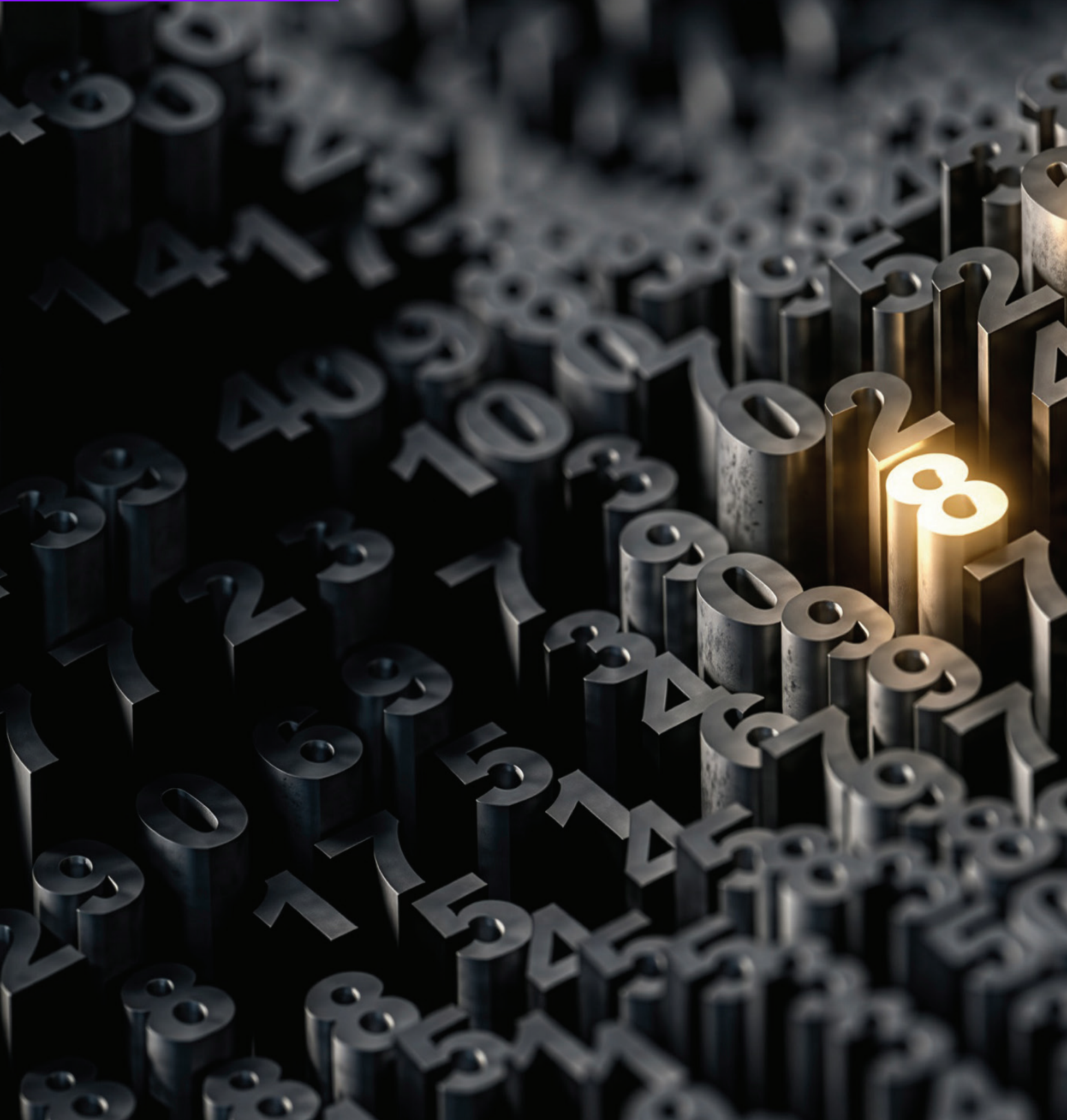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기구독자에게는 1년치(12개월) 외에 추가로 2개월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0,000원
- 정기구독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nara.kdi.re.kr>

-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 Special

2027년 나라살림





지난 9월 1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을 반등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눈에 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역·인재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도 국가 재정이 어떻게 쓰일지
『나라경제』가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들어봤다.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총력



김영현
기획예산처 예산소통협력과장
yh9778@korea.kr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적극재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기 반등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새정부 출범 직후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 총지출을 8.1% 확대 편성했다. 특히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 부담을 덜고 성장을 뒷받쳤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3.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확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회복에 안주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산업 경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여부가 국가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분쟁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과 인재·지역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동시에 성장의 혜택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목표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2026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시에 관리재정

수지는 GDP 대비 -0.1%로 전년보다 3.8%p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져 다시 40%대에 진입한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 AI,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추가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이다.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천억 원을 조성하고 그중 45조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한다.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고 세입 여건 악화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동시에 재정 안정화 장치라 할 수 있다.

2027년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를 총력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산단 등 필수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지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총 21조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프린터급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한 '모두의 AI' 서비스도 개발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한다. 핵융합·소형모듈 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에 집중 투자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준비한다.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보급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창업펀드 출자·용자를 늘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패의 경험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창업시대를 뒷받침한다. K컬처와 관광 등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청년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53.5% 증가한 43조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인턴학기제를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아카데미를 확대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

총예산 820조9천억 원

미래대응기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신설한다. 특히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 본수당 등 기존의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로 통합·단순화해 지원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인다.

청년 예산 43.3조 편성해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고 복지 예산 5년 내 최대 증액, 취약계층 복지에 68.4조 투자

넷째,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성장의 혜택이 특정 세대와 계층,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복지·민생 투자를 두텁게 확대한다. 2027년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9.3% 증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적극 복지도 68조4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대폭 확충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한다. 아울러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교육·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전통적인 복지뿐 아니라 세대·계층·지역·산업 간 구조적 양극화에도 폭넓게 대응한다.

다섯째,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국방·재해 대응 분야에 38조3천억 원을 투자해 핵추진잠수함·KF-21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전력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하도록 뒷받침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마약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원유·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강화한다.

2027년 예산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투자계획이다. 미래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그 성과가 청년과 지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시에 지출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오늘의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㉞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성장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자원안보기금

잠재성장률 반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



박경찬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
kcparkk@korea.kr

최근 세계경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넘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한편, 경제안보와 미래 전략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7년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2026년도 본예산보다 15.7%(5조4천억 원) 증가한 총 39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예산은 1조6천억 원, 기금은 38조1천억 원이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수출금융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올해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등 전략적 자본·금융 지원 확대하고 차세대 태양광, 그래핀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지원 강화

먼저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에서는 국부펀드를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에서 나아가 경제안보와 적극적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도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업의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중동전쟁 등 국제경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을 2026년 100억 원에서 2027년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리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 회수기간이 긴 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단도 확충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중동전쟁 등 국제경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해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을 2026년 100억 원에서 2027년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리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거나 투자 회수기간이 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미래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AI·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AI 패키지'의 첫 사업으로 1억7천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에 착수한다. 수원국의 AI·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AI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추격형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낸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15대 세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각 과제별 주관부처와 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과제를 추진해 왔다. 2027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범부처 예산은 올해 2조7천억 원보다 33.5% 증가한 3조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신소재인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 지원을 1,138억 원에서 1,615억 원으

총예산 39조7천억 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전략투자계정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AI 패키지

로 확대하고, 차세대 태양광과 차세대 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는 1조1,046억 원에서 1조7,068억 원으로 늘린다. K콘텐츠와 K식품 등 K불업 분야에도 1조6,513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기존 15대 과제 외에 피지컬 시의 핵심부품인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신규 과제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2026년 116억 원에서 2027년 620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외교 성과가 기업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기업별 맞춤 지원… 국가자산 통합 관리하고 유류 국유재산 활용에 청년 참여 기회 마련

2027년 재경부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수출·수주와 해외 진출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담았다. 우선 ‘수출플러스 지원단’을 운영해 기업이 수출·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AI 및 클라우드 기반 수출·수주 지원사업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 데이터를 허브화하고 AI 기능과 기업의 피드백을 결합해 기업의 질문과 수요에 맞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수출·수주 현장 지원은 경제외교 성과와도 연결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외교 연계 통상 전략형 패키지 사업’을 통해 정상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분야 성과가 실제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진출 전략 조사와 마케팅, 법률, 수출금융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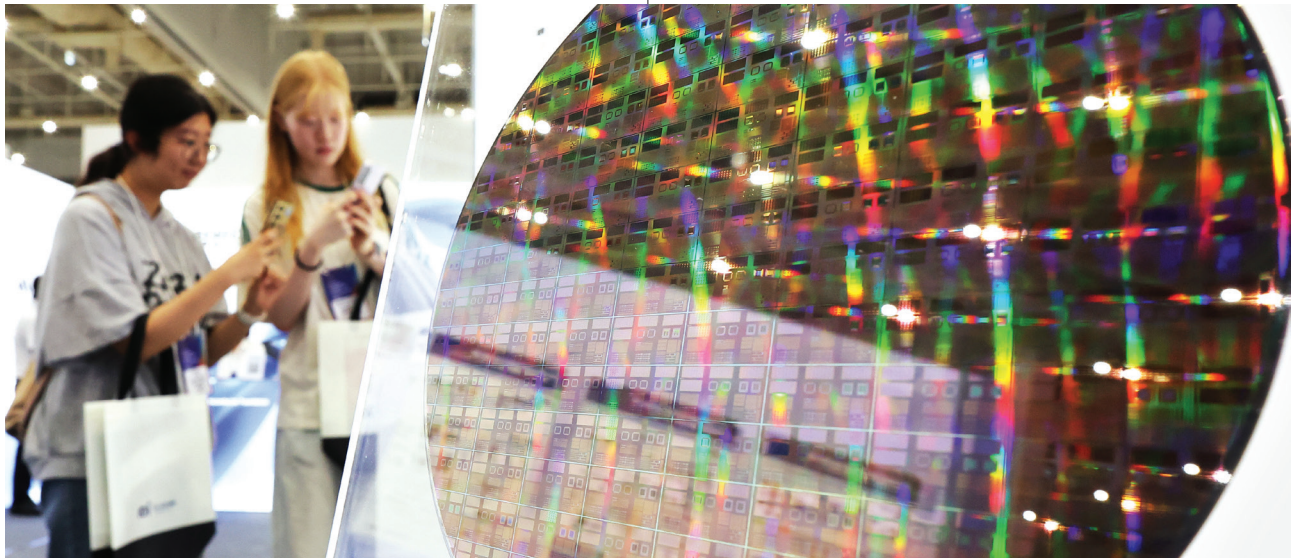
등을 기업별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 경제외교의 성과를 후속 사업과 기업 지원으로 이어가기 위한 사업이다.

첨단전략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보강한다. ‘전략경제 제도 기반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한·OECD 구조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OECD와 연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구조개혁 의제 발굴, 국제비교, 정책·제도 설계, 정책 현장 점검 등에 관한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자산의 관리와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하나로 연계하는 ‘국가자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폐파출소 등 유류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D디자인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사업 기획과 설계, 시공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유류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7년 재경부 예산안은 전략적 자본·금융 지원과 공급망 대응,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수출·수주 현장의 애로 사항 해소, 경제외교 성과의 후속 지원, 전략경제 제도 기반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더해 정책의 실행 기반도 보강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지난 8월 26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출플러스 지원단

경제외교 연계 통상 전략형 패키지 사업

전략경제 제도 기반 조성 사업

국가자산통합관리시스템

AI와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대도약 이끈다



전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장
wjscdgn@korea.kr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예산안인 만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편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미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은 2026년 예산 대비 24.5% 증가한 총 29조6,476억 원이다.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14조1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36%이며, AI 예산은 올해보다 84.3% 증가한 9조4천억 원을 편성해 강력한 혁신 성장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예산 편성 방향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차세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분야'와 핵융합, 소형모듈원전(SMR), 양자 등 '7대 SEED(미래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이끄는 데 집중했다.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DC 핵심 솔루션 국산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 AX 가속화... 딥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영재학교·연구중심대학 확대

첫째,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9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AIDC 핵심 솔루션의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데이터 확보체계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아울러 극미세·적층형 반도체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기술 개발과 조기 실증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독자적인 최상위급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GPU와 데이터 등 핵심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초효율·경량화 AI와 온디바이스 기술 등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AI기술 개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안 특화모델·서비스 개발과 중소기업 대상 AI 보안서비스 보급 등 고도화된 AI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가 구축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우리 AI 모델로 개발한 범용 AI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특화서비스도 개발·탑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과 산업 분야 AX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내 민간 개발 역량을 내재화해 AI 기반의 국민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AI 자율실험실, 과학기술 특화파운데이션 모델 등 R&D 혁신의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AI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에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해 기후·식량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주도하고, AI중심대학을 대폭 확대해 대학의 AI 교육을 혁신하며 전 국민 대상 교육·실증 및 AI 경진대회를 확대하는 등 AI 성장 사다리도 튼튼히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AI 이후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AI로 급증하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R, 핵융합 등 미래 청정에너지를 조기 개발하고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로서 양자·첨단바이오·우주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을 위해 나노·소재 원천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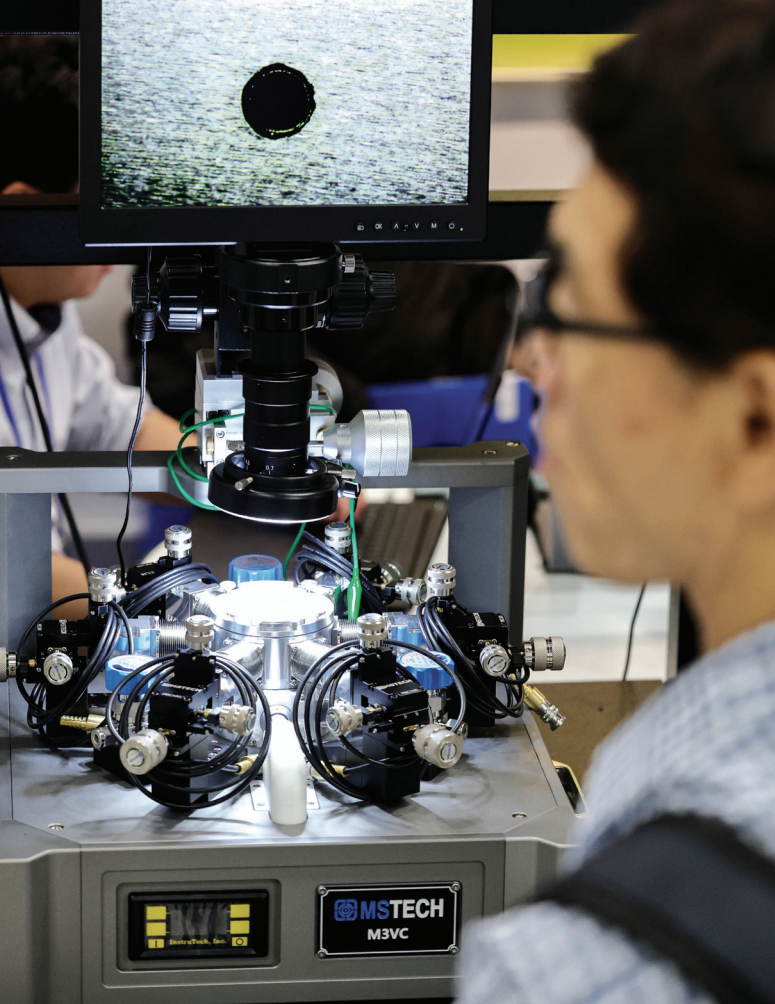
바이오·반도체·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의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과제 확대 등 연구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 연구자 창업 등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지원사업에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 사업을 신설해 정부 투자에 대한 회수 및 재투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신진·지역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영재학교, 연구중심대학을 신설·확대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대통령과 학장학금 등 장학금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4대 과학기술원에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단과대와 AX 공동연구소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총예산 29조6,476억 원

AI 자율실험실

글로벌 AI 허브 조성

딥테크 창업 활성화



지난 9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양자산업대전'에 가스 측정 및 진공환경 실험을 위한 소형 진공챔버가 전시돼 있다. © 연합뉴스

셋째,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9천억 원을 투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역량에 기반한 자율 R&D 사업을 확대해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재난, 불법 마약류 및 딥페이크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정부 R&D 예산 대폭 확대해 전략기술 분야 집중 투자... 투자형·지역자율형 R&D 도입하고 연구 환경 개선

한편 정부 전체 R&D 예산은 39조5천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1.2%(4조 원) 증가했다. 2027년 정부 R&D 예산의 증가율은 최근 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과학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독자적인 최상위급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GPU와 데이터 등 핵심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초효율·경량화 AI와 온디바이스 기술 등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안 특화모델·서비스 개발과 중소기업 대상 AI 보안서비스 보급 등 고도화된 AI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R&D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 R&D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최고·최초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11조 원에서 13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피지컬 AI, AIDC 등 국가 대도약의 중추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에 5조8천억 원, SMP·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미래 신산업으로 꽃피울 7대 SEED에 3조7천억 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혁신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투자형 R&D 사업 도입과 함께 지역자율형 R&D 사업, 국방·K방산 R&D 사업 등을 강화해 민간·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R&D 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이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정책 목표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10대 NEXT 전략기술

투자형 R&D

국방·K방산 R&D

지역자율형 R&D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AI로 행정 혁신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토대 마련



김동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mistily@korea.kr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총 84조7,036억 원 규모로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91.1%를 차지하며,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4,503억 원 규모다. 나머지 7조634억 원이 내년 행안부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약 8.3%를 차지한다.

행안부는 해당 사업비 예산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며 지역의 고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위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고자 한다.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눈여겨볼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AI 민원창구에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통합민원플랫폼 구축하고 재해 보험료 지원해 빠른 일상 회복 뒷받침

먼저,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행안부도 AI를 기반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행정서비스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의 본격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 18억 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203억 원을 편성했다. 여러 민원창구를 번거롭게 방문해야 했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해 일부 정부 부처에서 도입 중인 ‘온AI’를 범부처에서 연중 운영하고자 54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직자의 자유로운 AI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섬 지역 체류 관광객에게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섬 반값여행’이 시작된 가운데, 사진은 7월 16일 섬 반값여행 대상지역인 전남 여수 하화도의 풍경. ©연합뉴스

위함이다.

이와 같은 AI 기반 행정 혁신은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는 예산 2,716억 원을 편성해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일상 속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간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해일·고립 등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마을 단위의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1,579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4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실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확대 보급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한

총예산 84조7,036억 원

AI 민주정부

온AI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경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393억 원을 편성해 재해로 무너진 국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적극 돕는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력산업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도 지원
셋째, ‘지역이 스스로 일궈 나가는 성장’과 ‘전 국토의 고른 성장’이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안부는 내년에도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자생적인 사회연대경제를 매개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지역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연구·교육 강화 등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449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규모도 1조4,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우대 할인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성장까지 꼼꼼히 챙긴다.

여객선을 이용해 섬 지역에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으로 구성된 팀에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섬 반값여행’ 정책을 확대한다. 섬 지역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2억 원을 편성했다.

넷째, ‘과거사 정리라는 숙제를 다음 세대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행안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나서려 한다. 먼저,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운영 중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에 42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여순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시범사업을 연중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포함된다.

또한 내년에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예산으로 19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기념행사는 무엇보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준비함으로써 K민주주의의 주역인 시민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직접 계승하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여부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만들었던 ‘모두의 토론회’를 내년부터 정례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13억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달성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광역교통·인프라 등 구축에 활용할 2조8,500억 원을 편성했고, 아울러 자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 6,500억 원도 함께 책정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의 우수 사례이자 ‘5극 3특’ 구현의 주요한 축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행안부 내년도 예산은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키워내고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2027년도 행안부 예산안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섬 반값여행

모두의 토론회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달성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congdam@korea.kr

오늘날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기대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일차적 기능을 넘어 이상기후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식량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 그리고 온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농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편성됐다.

직불제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소득 안전망 다각화...

청년 농업학교 신설하고 전문 경영 실현하는 공동영농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책임 농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 아래 농업인이 소득 불안과 재해에 대한 우려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그 첫걸음으로 본격적인 '농업직접지불(직불)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 단가를 논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고, 전략작물 직불은 지급 단가 인상과 더불어 실질적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비료용 작물)'을 신규 도입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전망을 다각화했다.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장 수준을 대폭 늘렸다.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의 피해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상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농작업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가뭄 등 극한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을 10배 이상 확대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 농업인의 창농을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돕는 '청년 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 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맞춤형 농지 공급체계를 강화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지급 수준을 높여 고령농의 노후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가 원활히 이양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 농가 중심의 경영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혁신에도 과

지난 9월 3일 경북 대경사과원에농협 안동농산물처리장에서 농협 관계자가 강풍·우박으로 피해를 본 사과를 수매해 트럭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총예산 22조2,215억 원

농업직접지불 3조 원 시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감히 투자한다. 집적된 농지를 기반으로 전문 경영을 실현하는 공동 영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촉진한다. 농업인은 농지를 출자함으로써 배당을 지급받고, 전문 영농법인이 경영함으로써 영농 효율성과 수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트랙터 등 농업 현장에 AI 접목을 위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원예작물에 대한 생육 관리 및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 대응한 시설 신·증설 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유업체 지원을 확대해 낙농산업의 수급 불균형도 해소해 나간다.

산지-소비지 연결하는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35개 군으로 2배 확대

유통 분야에서는 산지와 소비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제·정산 자금과 전용 물류체계 바우처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본

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농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보조율도 50%로 상향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82개 전체 군 지역으로 대폭 확대 적용한다. 농촌 공간계획에 기반한 공간 정비 사업과 함께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빈집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생활인구 유입도 촉진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농식품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자재 구매를 촉진하는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하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와 스케일업 자금도 확대했다.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 지원 품목도 확대한다. 대학생의 식사 부담을 줄이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확대해 먹거리 복지를 증진한다. 농업계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정책 수요에 발맞춰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고, '펫보험' 활성화 및 진료비 투명화를 위한 동물 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예산은 제정 중인 '동물복지기본법'과 함께 선진국형 동물복지체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기금 칸막이로 인해 긴급한 정책 수요나 기후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기금들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이다.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농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할 단단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에 더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사업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출 효율성도 높였다.

농식품부의 수많은 사업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지만 결국 그 효과는 국민이 누리게 된다. 안정적 생산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중하게 확보된 재정이 현장 농업인과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어촌 기본소득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천 원의 아침밥

'동물복지기본법'

농업발전기금

제조 AI 전환과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에 역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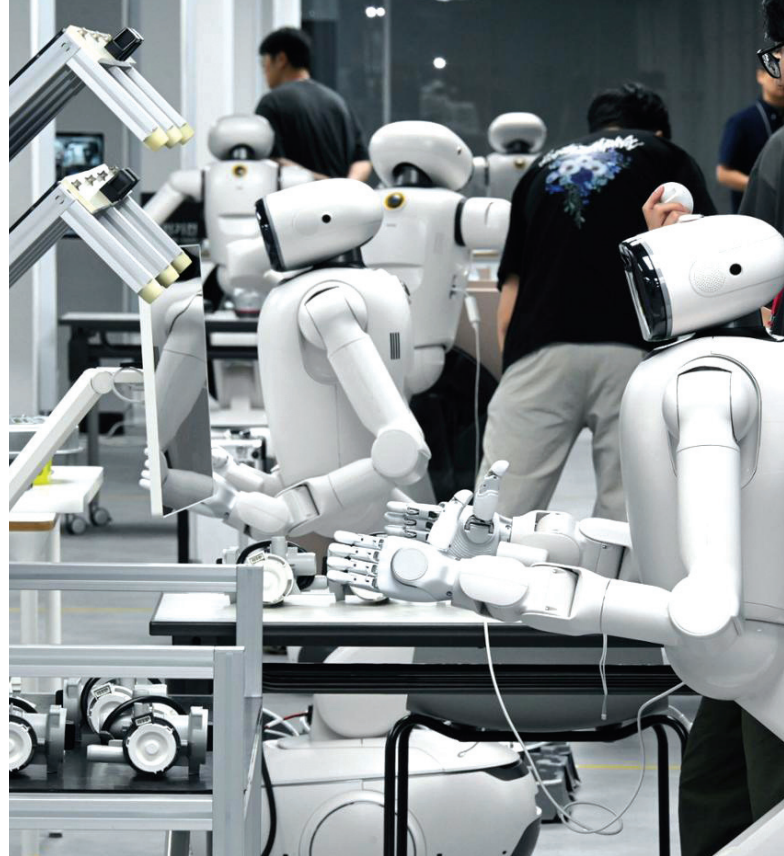
손용하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yongha8888@korea.kr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6년의 9조4,342억 원보다 40.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여기에 범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된 산업부 소관 핵심사업 예산 9,118억 원을 포함하면 14조1,691억 원, 증가율은 50.2%에 달한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위해 제조 AI 전환(M.AX)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첨단산업 초격차 육성, 5극 3특 지역 주도 성장, 산업·자원안보 강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5대 핵심과제에 집중 지원한다.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하고 로봇 3대 취약 부품 국산화 추진… 친환경차·미래차, 무탄소 선박, OLED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

첫째로, AI를 활용한 제조혁신 가속화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조6,885억 원에서 2027년 3조7,435억 원으로 2.2배 수준(122%)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주무 부처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조 AI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AI가 제조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국산 기술로 구현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 AI 기술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우리 제조업의 핵심자산인 숙련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등의 제조 암묵지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해 AI 모델과 로봇 개발에도 활용하고 확산해 나간다. 아울러 다양한 제조 AX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양질의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집·관리하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AI 모델 학



LG전자의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가 세탁기 제조공정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촬영한 사진. © LG전자

습과 고도화, 제조 현장 실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청년 AX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전략적 투자임을 감안해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글로벌 AI 로봇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산화율이 낮은 액추에이터, 로봇 손, 센서 등 3대 취약 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 로봇 생태계 고도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학습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 10대 업종별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초기 수요 창출과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7년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 휴머노이드 200대를 보급한다.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에 1조5천억 원 규모의

총예산 13조2,573억 원

준비된 청년 AX 인재 양성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10대 업종별 로봇 데이터 팩토리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기업의 호남권 투자 결정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정적 뒷받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AIDC) 확산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지도록 AIDC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과 연계해 차세대 전력·냉각구조 기술 등 AIDC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AIDC 구축·운영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둘째, 첨단산업의 육성 및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분야 지원을 위해 2026년 1조 1,905억 원에서 2027년 1조 2,421억 원으로 516억 원(4.3%) 증액 편성했다. 자동차 분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AI 자율주행모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플랫폼, 차(車) 반도체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부품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차 인력 양성, 판로 개척, 자금 등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조선은 무탄소 선박(암모니아·수소·전기 추진), AI 자율운항 선박,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DX) 등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개발 완료된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 검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조선·해운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대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디스플레이는 OLED 초격차 유지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해상도 대면적 OLED 디스플레이 공정 및 고효율 발광재료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차전지는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의 재자원화를 위해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바이오는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5국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초광역권 R&D 사업 신설하고 비축 확대, 도입선 다변화, 가격 안정 등 자원안보 강화에도 투자

셋째,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2026년 1조 2,797억 원에서 2조 731억 원으로 1.6배 수준(62%)으로 확대 편성했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했다. 대규모 지방투자를 대상으로 투자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설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투자 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경우 기업의 지방투자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그간 지자체를 통해 기업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업의 지방투자자와 지역의 강점 등을 기반으로 선정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권 단위의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성장엔진별로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성장거점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정주 환경 개선,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AX 실증 산단 구축 확대, 데모 다크팩토리 공간 신규 조성 등 산업단지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넷째, 석유·핵심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한 예산은 2026년 1조 9,964억 원에서 2027년 3조 6,825억 원으로 1조 6,861억 원(84.5%)을 확대 편성했다. 석유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상시화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제시설 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핵심광물은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이나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수출통제 확대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석유·핵심광물 등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투자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석유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이 지속됨에 따라 올 4분기 석유정제업자 손실보전 예산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세·비관세 장벽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 개척 지원 예산도 2026년 8,191억 원에서 2027년 8,981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마케팅 등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수출 확대 및 수출 거래 위험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확대한다. 특히 대미 전략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과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단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바람이 거셀수록 돛을 더 팽팽히 올려야 한다. 2027년 산업부 예산안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대격변과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우리 기업들의 멈추지 않는 혁신과 결합해 거친 글로벌 격랑 속에서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굳건히 지탱해 내기를 기대한다. ㉮

대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국내복귀투자보조금

AX 실증 산단

데모 다크팩토리

자원안보기금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더 두텁게 깎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
visionijc@korea.kr

예산은 숫자의 크기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특히 보건복지 예산은 어려운 사람을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삶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을 주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다.

2027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피지컬 AI 도입·실증 등 3조7천억 원을 포함, 총 152조4,328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는 2026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안 약 820조 9천억 원의 18.1%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5국 3특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모두의 돌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미래 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의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하고 기초연금 차등 지원 도입… 지역·필수의료 살리는 데 약 1조3천억 원 집중 투자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한층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한다. 우선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폭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 207만8천 원에서 221만7천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 2만 가구와 의료급여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 현장의 AI 혁신을 가속화한다.
다른 병원 재방문 시 QR인증으로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진료 공적 전달시스템도
마련한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도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을 더 지원하는 ‘하후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노인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이 기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4천 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감액 비율도 기존 20%에서 저소득층(하위 0~45%)은 10%로 축소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넓혀 26만7천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긴급 위기 상황에도 적극 대응한다. 위기포착 즉시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우선드림’ 예산 53억 원을 신설하고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장 운영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및 생명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자살 시도 및 사망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전문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967명에서 1,500명 수준까지 확충한다. AI 기반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둘째, 누구나 사는 곳에서 필수요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필수요료를 살리기 위해 총 1조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605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안정적인 필수진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도 다진다. 10년간 지역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490명)를 신규 도입하고, 취약지 근무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448명)로 확대한다.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도 소아·모자 등 필수분야 전공의·전임의에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로 확대한다.

총예산 152조4,328억 원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원

국가자살대응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전국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지역의료 주축 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장기재직 보상체계에 마련한다. 지방의료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추도록 3년간 489억 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전공의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공공야간·심야약국은 25개소 확대해 265개소를 운영한다.

노인·장애인·아이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전 국민 AI 기본 의료 시대 열고 바이오헬스 R&D 투자 대폭 확대
셋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인프라를 전면 확충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군·구 지원 상한을 최대 16억 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으로 전년 대비 667억 원 증액한 1,28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복합 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노년층의 활력 있는 노후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전담인력도 1,341명으로 2배 이상 확충한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의 ICT 응급안전 안심 장비 보급도 31만7천 개로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4만9천 명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 수급자가 65세가 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 중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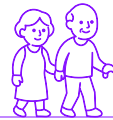
넷째,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과감하게 지원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대폭 개편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의 통합 출산·양육 패키지를 도입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나눠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지방 우대지역은 500만 원씩 가산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2027년은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에게 기존 월 10~13만 원보다 인상된 매월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원하며,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방학 중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9~18시 운영, 점심·저녁 제공) 사업에도 279억 원을 투입한다.

월 최대
생계급여액
(4인가구 기준)



221만7천 원

노인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 68만4천 원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다리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의 장기적 노후 소득보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 18세(2009년생, 45만1천 명)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89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회복필요 청년을 지원하는 회복지원 기관을 시·군·구 단위 120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보건·복지 및 바이오 분야에 청년 공공 일자리 2만 개를 발굴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AX와 바이오헬스 혁신을 강력히 이끈다. AI 기술을 복지와 의료 현장에 도입해 돌봄인력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기반 구축에 총 691억 원을 투자한다.

의료 현장의 AI 혁신도 가속화한다. 다른 병원 재방문 시 QR 인증으로 의료영상 공유하는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진료 공적 전달시스템도 마련한다.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를 연계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연구자·기업에 데이터와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AI 데이터 허브', 취약지 의료에 진료보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통해 전국민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어간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과감히 투자한다.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및 K의료 해외환자 유치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약개발·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린다.

2027년 예산안은 국민을 지키는 단단한 사회적 안전매트이자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소중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따뜻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취약지돌봄센터

아이맞이지원금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전력, 용수, 녹색 전환에 투자



송용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yksong04@korea.kr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국민의 일상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에는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송·건물 등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의 녹색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갈수록 빈번해지는 극한호우와 가뭄, 폭주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026년 대비 18.3%(3조9,737억 원) 증가한 25조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후부의 이번 예산안은 크게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전환, 기후재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경쟁력 뒷받침할 전력·용수 공급능력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두 배 이상 확대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부지와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충분한 용수가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와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력과 물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된 것이다. 이에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1조9,35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전력 분야가 1조5,489억 원, 용수 분야가 3,862억 원이다.

전력망은 새로 건설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설비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는 시작 지점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상송전망과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를 도입한다.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과 신속한 계통 구축을 고려해 일부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under grounding)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도 지원한다.

물 공급 역시 산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1,196억 원을 투입하고 충청권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용수 기반도 확충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를 통해 물 공급능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시설도 함께 마련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깨끗한 전기와 물을 제때 공급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 6,480억 원에서 1조5,10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대출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유향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도록 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구축도 확대해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국민 생활 가까스로 가져오는 노력도 이어진다. 가정형 태양광 패널 지원 규모를 20만 가구까지 확대해 가정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 투자 역시 중요한 축이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와 풍력발전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혁신 제조 기술개발과 관련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이 발전소와 전력망에만 머물러서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교통과 난방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보다 32.8% 늘어난 2조1,403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한다. 택시 등 운행 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에 비해 주행거

총예산 25조7,319억 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

수요유치형 변전소

햇빛소득마을

리가 길고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해 배달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소음과 매연 문제도 함께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약 33%↑,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실증도 추진...

침수·가뭄·녹조 등 기후재난 투자,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난방 분야에서도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난방과 온수 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을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늘린다. 단독주택 위주의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동주택 실증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계가 녹색 전환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저탄소 전환 금융 공급 규모를 8조7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늘리고,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 채권과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심이 침수되고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하며 폭염에 의해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재난에 대한 투자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大深度) 빗물터널과 도립천 지하방수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가뭄 지역에 처음 도입하고,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 확보시설과 취·양수시설도 확충한다.

매년 반복되는 녹조 문제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한다. 내년 수질개선 투자는 올해보다 74.7% 늘어 5,986억 원으로 확대된다. 낙동강과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집중 관리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동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늘려 녹조가 발생한 뒤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녹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단계부터 줄여나간다. 녹조 대응의 중심을 '사후 제거'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순환경제와 국민 생활환경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희토류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도 100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육곰 종식을 위해 사육곰 해외 이송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보



지난 4월 24일 서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 연합뉴스

다 의미 있는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 투어도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중 시설 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기본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히트펌프를 통해 경제와 일상의 녹색 전환을 앞당기는 동시에, 홍수·가뭄·녹조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 국민안전을 각각의 과제로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때 재정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녹색 전환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

열에너지 전기화

녹색지방채

비점오염 저감시설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 투어

청년, 양극화 완화, 안전한 일터에 집중 투자



김태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tykim00@korea.kr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씨앗을 사러 장터로 떠난 세 명의 농부가 있었다. 첫 번째 농부는 당장 배를 채울 수 있는 굵은 곡식만을, 두 번째 농부는 매년 일정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씨앗만을 사왔다. 하지만 세 번째 농부는 달랐다. 당장 먹을 곡식뿐만 아니라 가뭄과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씨앗, 새롭게 다가올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그리고 함께 농사짓는 이웃에게 나눌 씨앗까지 꼼꼼히 나눠서 사왔다. 몇 년 후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첫 번째 농부의 밭은 황폐해졌고, 두 번째 농부의 밭은 가까스로 버티는 수준이었다. 반면 세 번째 농부와 그의 이웃은 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다. 그 비결은 변화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마을 전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현명한 투자’에 있었다고 본다.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일, 특히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운용 방식 역시 세 번째 농부의 선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 재정은 단지 눈앞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AX 시대 청년 일자리 예산 전년 대비 7천억 증액하고 소상공인·비정규직·노무제공자 대상 지원사업 확대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9,537억 원은 이러한 투자 철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6년 대비 3.4%(1조2,776억 원) 늘어

난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이고 따뜻하게 바꾸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투자전략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가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X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번 예산안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디지털 직업 훈련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고용노동 행정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26년 2조6천억 원에서 2027년 3조3천억 원으로 7천억 원가량 증액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번 청년 지원의 핵심은 ‘일자리 진입 준비 → 경험·경력 지원 → 취업·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다. 우선 일자리 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3,793억 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 가랜티 사업)’를 신설한다. 지원 범위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해 약 16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구직촉진수당도 월 5만 원 인상에 매월 6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경력직 채용 관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스스로 경험·경력을 쌓을 기회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청년들이 AX 프로젝트와 같은 현장 실무 역량을 쌓고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750명이며, 이들이 최소 동종업계 평균 임금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을 6,089억 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AI 훈련 인원도 2만 명까지 늘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고, 특히 비수도권 청년은 우대 지원한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적응은 더딜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격차도 커지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비정규직·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보강한다. 대표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을 7,140억 원 편성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108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에 더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 보험료까지 추가 지원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해 나간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쉼터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

총예산 38조9,537억 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사업

K-디지털트레이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장통교에서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열고 배달라이더들에게 생수·쿨토시 등을 담은 쿨키트를 전달했다. © 연합뉴스

어년 67억 원을 편성했고, 참여하는 지자체도 60여 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500명 이상 늘리고 시간당 단가를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및 이주노동자 적응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증액했다.

고위험 사업장 특화 지원 예산 신설 등 산재 예방 주력하고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는 일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정부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산재 예방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업종·사업장 특성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화재·폭발 등 사고 위

험이 높은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위험 사업장 특화 지원 예산’ 401억 원을 신설,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육아수당’ 신설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 감소 보전에 노력하고,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일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심하게 편성된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이 현장 구석구석에 전달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일터개선사업

고위험 사업장 특화 지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수당

해양수도권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본격 육성



임창현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lch1119@korea.kr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8조2,63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6년 예산 7조4,583억 원보다 10.8%(8,053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어촌 분야 약 3조9천억 원, 해운·항만 분야 2조2천억 원, 해양산업 1조2천억 원, 해양환경 5천억 원, 과학기술 2,733억 원,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한 연구개발(R&D) 예산 9,817억 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해수부는 늘어난 예산을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 신산업 등의 과제에 집중 투자해 2027년 해양수산 분야의 대도약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첨단해양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신규 투자… 수산업 AX 가속화하고 K-GIM 선도지구 지정

해수부는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과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산업을 책임지는 부처다. 해수부가 소재한 부산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대동맥이자 세계적인 해상물류 허브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했고, 올해 5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하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해양수도권 조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지역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



지난 8월 20일 부산 북항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투입될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해 있다. © 연합뉴스

른 지역 청년도 해양수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동남권의 경제 환경을 만들어나간다. 해양수도권으로 우수한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에 121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과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에 98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둘째, 미래 북극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 관련 데이터 축적, 쇄빙연구선·컨테이너선 개발 등에 98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에는 북극 관련 국가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포함돼 있다.

셋째, 해양수도권이 가진 '글로벌 물류허브'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해운항만업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진해 신항이 미주항로, 동남아항로,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 예산을 4,622억 원에서 4,816억 원으로 확대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하는 데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레벨4 완전자율운항기술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예산도 63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식량과 건강을 책임지는 수산업과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어촌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먼저 지난 6월

총예산 8조2,636억 원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

북극항로 시범운항

레벨4 완전자율운항기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업은 기존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에서 ‘잡는 양’(총허용어획량, 이하 TAC)에 대한 관리로 전환해 어업관리체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TAC의 전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적합한 어선 규모 조정, 어획량 검증 시스템 도입 등에 5,062억 원을 투입한다. 어선 규모는 노후어선 감축과 현대화·대형화된 신형 어선 건조 등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업 AX의 일환으로 양식업의 스마트화도 가속화한다.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같은 양식업에 AI 기술을 접목한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수작업 위주의 양식장을 자동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 60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 가공 지원도 294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K-Fish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도 늘린다. 김 수출 확대를 위해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해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형양식장을 비롯한 김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135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한편 김 수출 증가가 국내의 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축 대상에 마른김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24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원양어선 강제 노동 예방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해외시장분석센터 운

영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도 함께 병행한다.

연안여객선 공영제 신규 추진해 섬주민 교통권 보장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도입, 해양바이오·관광산업 등 신산업 육성

어촌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신규 예산 96억 원을 편성해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어촌의 주거·복지 등 인프라 개선 예산을 4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확대하고,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의 확대에 13억 원,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에 신규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나간다. 이와 함께 내수면 배합사로 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내수면 어가에 대한 정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바다에서 여는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폐기물 전 주기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 해변(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 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10개소에 도입한다.

깨끗한 우리 바다를 위해서는 해양폐기물뿐만 아니라 불법 이용도 없어야 한다.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SI 기반 공유수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 사업을 신설해 우리 바다를 불법 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아울러 고속단정,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바다가 가진 해양자원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삼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 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 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규 예산도 19억 원 편성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도 대폭 확대된 예산을 활용해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을 통한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수산업 체질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해양수산업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㉞

K-GIM 선도지구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심·어촌 상생모델 ‘Co-어촌’

권역별 해양 바이오 특성화 거점

성장 사다리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 지역 상권, 소상공인에 확산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운영담당관
ikik@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18조724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 원보다 9.4%(1조5,49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7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는 창업부터 성장과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 둘째는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에게 확산하는 것이다.

‘모두의 창업’ 2만 명으로 지원 규모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먼저,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는 올해 1만5천 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해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역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도시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 창업 패키지에 1,7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창업중심대학에는 1,083억 원을 편성해 딥테크 중심의 대학창업도 이어나간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억 원으로 늘려 민간 모

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둘째, 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혁신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성장전략 수립과 단계별 목표 설정을 돕는 신규 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 단순히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중기부의 여러 지원사업을 연계해 장기간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이버보안과 드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큐텔과 같은 안보전문투자기관을 신설해 유망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신속히 뒷받침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도 1,728억 원을 새로 편성해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2조5,537억 원으로 4대 신성장 분야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기술 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해 7,3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새로 공급한다.

셋째, 혁신기업이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다. 성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4,682억 원,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하는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284억 원을 배정해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촉진한다.

수출 지원체계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게 개편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 기반 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 패키지로 나눈다. 관련 예산은 3,13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는 238억 원, 해외 수출규제 대응에는 279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수출의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넷째, 실패와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재도전 생태계를 조성한다. 재도전성공학교는 예비 재창업자에게 실패 원인 분석과 심리 치료, 보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는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을 선발해 성장을 뒷받침한다. 예비 재창업부터 우수기업으로의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동반 사업 전환도 100개사, 3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의 두 번째 중점 투자 방향은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활력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조성한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40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지원을 확대한다. 한류 소비를 위한 관광거점

총예산 18조724억 원

모두의 창업

지역 창업 패키지

수출성장 패키지

재도전성공학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육성 사업인 '백년시장' 중 하나로 선정된
제주 동문재시장의 지난 7월 13일 야시장 풍경. © 연합뉴스

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연계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는 427억 원을 편성했다.

**‘점-선-면’ 입체적 지역상권 구축하고 ‘글로벌상권’ 지원 강화…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신설해 휴·폐업,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
점(창업)에서 선(상권)으로, 다시 면(지역)으로 확산하는 입체적인 지역상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미식과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콘텐츠로 개발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키우는 ‘로컬 테마상권’,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이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상권’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둘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두텁게 마련한다. 그동안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축해 온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영업 중인 때부터 위기와 폐업,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8천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해 휴업과 폐업, 재도전 과정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3,153억 원을 편성해 폐업 전후의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소상공인 200만 명에게는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건강 문제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셋째, 상생의 생태계를 넓히고 공정한 거래 환경도 조성한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도 고도화한다. 기술보호 수준 진단을 바탕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보안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에 247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관련 협회·단체 및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폭넓게 발굴한다.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실증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새로 선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약할 때 우리 경제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진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책임 있게 투입할 것이다. ㉞

로컬 테마상권

희망리턴패키지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기존 데이터
제대로 활용해
국가데이터 경쟁력
확보할 것”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일시—2026년 9월 9일(수) 오후 3시
장소—국가데이터처장 집무실(정부대전청사)
대담—양은주 『나라경제』 편집장

○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 지 1년입니다.

대통령도 “국가데이터 관리의 최고책임자는 국가데이터처”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간 무엇에 가장 주력하셨습니까?

지난해 10월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면서 기존에 통계 부문에서 해 오던 역할에 더해 데이터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까지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공공데이터, 산업데이터를 다루는 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를 총괄·조정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 직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초안을 만들었고,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법을 통해 부처 간 총괄·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갖추려 합니다. 법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을 갖추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체계를 만들고, 부처 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각자 DB를 구축·관리하는 체계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도 해왔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필요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국가데이터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본법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거버넌스 측면인데요, 모든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의견을 모아 총괄·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는 연계·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모아놓기만 해서는 가치가 생기지 않고 결국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국세기본법’, 금융·의료 관련 개별법 때문에 막혀 있는 데이터 연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드는 장치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셋째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 결국 생태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데이터 품질 제고와 메타데이터 관리 같은 기본적인 제도들을 법에 담아놓았습니다.

○ 생태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생태계는 어느 수준인가요?

미국의 빅테크들을 보면 약 20년에 걸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데이터에 투자해 왔습니다. 처음엔 동영상, 음성 같은 데이터를 모으면서 인도 등 제3세계 국가의 인력을 통해 하나하나 라벨링 작업을 거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았죠. 그다음 텍스트로 넘어가서 도서관 자료까지 데이터화하고, 최근에는 융합데이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근래엔 구글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데이터 축적에만 신경을 썼지 품질이나 활용 쪽에는 사실상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는 영미권에 비해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활용 영역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필

고려대 경제학 학사

1996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2016.04. ~ 2017.02.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2017.03. ~ 2018.02.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2019.07. ~ 2021.01.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2021.01. ~ 2021.12.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2021.12. ~ 2023.01.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2023.01. ~ 2024.01.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장
2024.01. ~ 2024.08.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2024.08. ~ 2025.08.	통계청 차장
2025.08. ~ 2025.09.	통계청장
2025.10. ~ 현재	국가데이터처장

○ AI가 국가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신데요. 왜 메타데이터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란 데이터 생산일, 목적, 항목 구성 등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데이터에는 이런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대해서조차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있어야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데이터와 연계·비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하는 통계 메타데이터도 메타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요즘 생성형 AI는 대부분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이라 텍스트에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게 기본 원리죠. 그런데 통계는 숫자다 보니 그런 방법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리 차이 때문에 AI에게 통계를 물어보면 틀린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통계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AI가 통계를 제대로 읽고 답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다른 통계 당국들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 통계에 원래 있던 설명용 메타데이터에 더해 AI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변수 간의 관계를 경로로 보여주는 온톨로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5종의 통계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엔 국가데이터처가 갖고 있는 주요 통계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통계데이터센터(SDC)에 AI를 기반으로 한 24시간 무중단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KDI 연구진들이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이 이 24시간 서비스일 텐데요(웃음). 제가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을 할 때도 가장 많은 민원이 정규 업무시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분석 코드를 넣었을 때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화재 위험까지 있어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언어에 대응하는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도입하면서 코드에 오류가 있는지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퇴근한 뒤에도 24시간 계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AI 알고리즘 못지않게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지난 1년간 법적 기반을 만들고 데이터 활용에 힘을 쏟았는데, 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면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공급이 늘고 품질관리도 이뤄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 봅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책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속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난도 분석이나 대용량 빅데이터 작업이 특히 도움을 받게 됐죠. 또 AI가 잘못 설계된 코드를 미리 탐지·수정해 주니 초보자에게도 편리합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 중인데요, 8월 말 기준 전체 이용 건수 중 8.2%가 야간 이용이었습니다.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곧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부처별 주요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를 준비 중이신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범정부 데이터의 원활한 연계·활용을 위한 ‘모두의 국가데이터(Hub&Spoke)’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별 데이터가 각자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폐쇄 환경에서 제한적으로만 개방돼 있어 이용자가 데이터들을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들을 안전한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허브는 국가데이터처의 인구·가구·주택·기업 등 전수 등록부와 고령자·사망자·주택소유자 같은 융합데이터가 되고, 스포크는 범정부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국세·금융·의료·교육 등의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는 연결된 데이터센터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계·결합하고 분석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연계·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 기술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앞서 말했듯 ‘국가데이터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데이터 보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체계가 구축되면 범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AI 기반 상시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가 조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시다시피 소비자물가동향은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빠른 겁니다. 해당 월의 물가를 그달

말에 바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여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 일 단위로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보려는 겁니다. 주요 생필품 중 농산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저희는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맡습니다.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 위주로 10개 품목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 합니다. 이건 매일매일 개별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거지 그 자체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관계부처 협조 차원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사람이 매일 눈으로 확인하기엔 품목이 너무 많으니 AI를 활용해 보려는 겁니다.

○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연계한 정책 맞춤형 융합데이터를 개발하고 있으신데요, 기존 통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개별 통계만으로는 정책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게 생활인구 통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 등록인구 전수 자료에 카드 자료와 통신 자료를 결합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책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정주민구보다 관광·체류 인구가 더 중요해졌는데, 그 인구를 저희가 분석해 생활인구 통계로 만들어낸 거였지요. 현재 생활인구를 포함해 청년, 아동·가구, 취업활동, 연금, 소득이동, 중소기업 등 기존 7종은 최신 자료로 갱신해 제공 중이고, 올해 안에 고령자, 사망자, 주택소유자 3종을 신규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에 국세 자료, 금융 자료, 저희가 가진 등록부 자료 등 중요한 게 많지만, 민간데이터도 업종이 다양하고 양도 훨씬 많습니다. 결국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서로 연계·융합할수록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 민간데이터는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의 대부분은 민간이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 언어 데이터 등은 기본적으로 다 민간데이터거든요. 여기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전용 데이터들, 예를 들어 교통데이터 같은 것들도 민간데이터가 많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민간 포럼에 기업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종종 “통신데이터를 그냥 받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데이터 영역 자체가 커나가지 못할 거예요. 저는 데이터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회사든 개인이든 스스로 DB를 구축해서 자기만의 데이터 자산을 갖추는 게 앞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민간의 개별 데이터들을 인정해 주는 생태계가 차근차근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중에 정책 수립 지원도 있을 텐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자살 문제와 관련해 데이터처만의 역할이 있을까요?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이라고 이미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합니

다. 한 7년 정도 됐는데, 기본 인적사항과 자살 원인으로 파악된 내용들을 담은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자살에 방대책에 바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황, 과거 질병 이력, 직업, 학력 등 경제·사회적 여건까지 함께 담은 데이터셋을 만들면, 어떤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사망자 융합 DB'라고 부르는데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며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브 DB로 '자살 DB'도 별도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새롭게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통계도 있나요?

올해 공표한 것만 말씀드리면, '국민시간이전 계정'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해서 연령별·세대별로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과거에는 시범적으로만 작성하다가 올해부터 정식 통계로 전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책을 세울 때 무급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지, 어떤 연령대에 지원금을 줘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정책이 많이 논의되면서 올해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지역공급사용표'입니다. 시도별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그리고 생산한 것 중 국내로 유통되는 부분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를 분석하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울산은 재화를 많이 생산해 주로 해외로 수출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균형 경제정책이나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 초대 처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임기 중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데이터도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걸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건 굉장히 막중한 책무지요. 지난 1년 동안 법적 기반을 만들고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활용 중심의 방향에 맞춰 힘을 쏟았습니다. 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면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공급이 늘고 품질관리를 이뤄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 봅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고, 지금 저희 정책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져 국가데이터처가 명실상부하게 '처'로서 자리를 잡는 것, 우리나라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는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은 일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통계 조사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삶의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가 돼서 개인도 그걸 활용하고 있지요. 이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개인의 삶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앞으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는 가장 오래되고 정제된,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면서 전체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통계조사에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집이 있어도 집이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보다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도 집다운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여관·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55만에 육박하며 5년 전보다 11.2% 증가했다.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부족한 물량과 낮은 주거의 질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라경제』는 현장에서 주거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현재 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거주가구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사용법
1. 안전핀을 빼고
2. 노즐을 잡고
3. 손잡이를 눌러
4. 분출구에서 불을 끄십시오

환기는커녕 목숨도 앓아... 재개발 등으로 점점 밀려나는 주거취약계층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choiey6012@gmail.com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모습.
© 연합뉴스



오늘날 가난은 과거의 판자촌처럼 눈에 띄는 공간에 있지 않다. 고시원과 지하는 잘 보이지 않고 쪽방촌은 고층 빌딩 뒤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 2018년 11월 9일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고시원'이, 2022년 8월 8일 관악구 (반)지하 수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지하'가 뉴스에 등장했다. 지하에서는 화재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1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여성이, 4월 중랑구에서 50대 남성이, 6월 성남시에서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층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전국의 지하 거주 일반가구는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20년 32만 7천 가구에서 2024년 39만8천 가구로 7만1천 가구가 증가하면서 조사 이래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서울의 지하 거주 가구는 2020년 20만1천 가구에서 2024년 24만5천 가구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시원,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포함된다.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2010년 12만9천 가구에서 2015년 39만4천 가구로 크게 늘었고, 이후에도 2020년 46만3천 가구, 2024년 48만1천 가구, 2025년 50만5천 가구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만으로는 주거취약가구의 증가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0년부터 100%를 넘기 시작해 2025년 103.3%에 이른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일반가구 기준 지하 거주 가구의 97.5%,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54.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거취약 가구의 증가 이유가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저렴한 집이 신축 고가 아파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고시원·지하·쪽방으로 밀려난다. 이들은 채광이 되지 않아 한낮에도 어둡고 환기가 안 돼 켜켜한 냄새가 나는 집에서 건강과 안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주거복지가 강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증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어떤 집에 사는지는 정책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주거복지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의 소득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사이 고시원·지하·쪽방 거주 가구의 주거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도 취약계층에 배분되는 물량은 충분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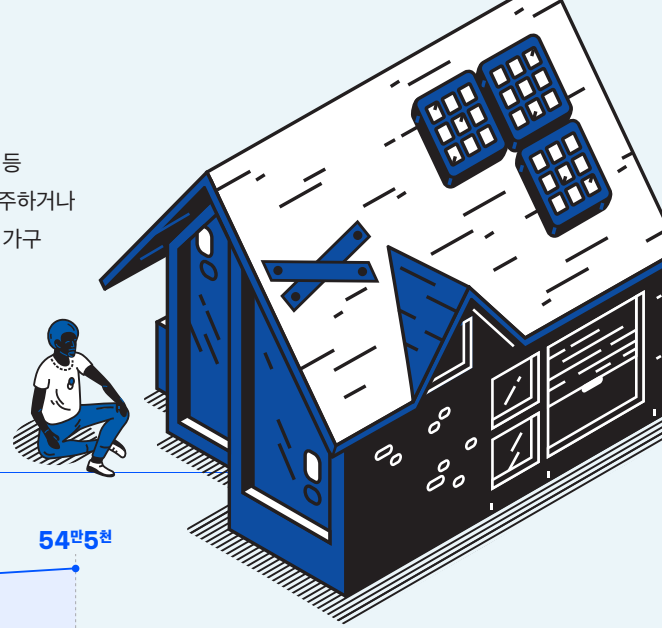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해당 주택의 안전·위생 등 주거 품질과 연계하는 제도가 미비한 탓에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 인상이 오히려 쪽방촌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빈곤 비즈니스'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복지의 성과를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주거급여 수급자의 증가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살만한 집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취약계층의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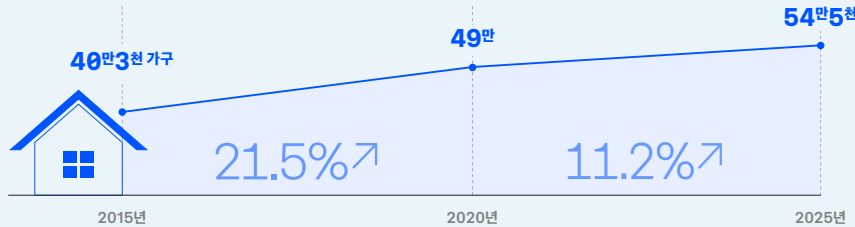
판잣집·여관 등에 사는 주거취약가구 약 55만, 5년 새 11.2% 증가

주거취약가구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가구



주거취약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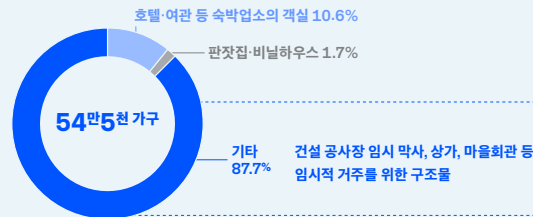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2026

서울시 쪽방촌 현황



주거취약가구 거처별 비중(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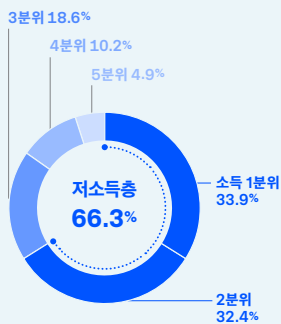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및 연합뉴스, 2026

주요 지역별 주거취약가구 현황(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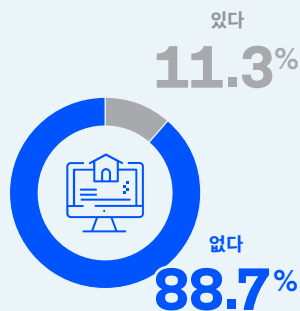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2026

주택 이외 거처 가구 소득 5분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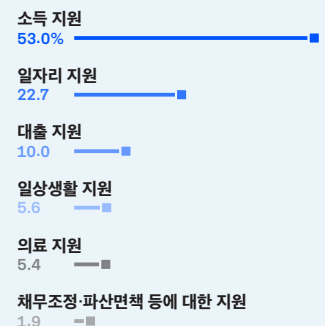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주거지원 외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1순위)



정리 『나라경제』 편집실

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전국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조사 시행(5년 주기)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조사, 2023

“주거지원, 이전 제대로 된 법률 위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쪽방·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지원하고 주거정책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 온 이가 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를 만나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홈리스행동은 어떤 단체인가?

2001년 12월 12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실사)’로 출범해 2010년 현재의 ‘홈리스행동’으로 단체 이름을 바꿨다. 기존의 ‘노숙인’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홈리스’의 개념을 사용해 활동하기 위해서였다. EU, OECD 등에서 홈리스는 거처가 없는 사람,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비적정 거처에 사는 사람, 더부살이하거나 가정폭력 등에 노출돼 불안정한 거처에 사는 사람을 포괄한다. 이처럼 대상을 넓게 규정한 홈리스라는 용어를 채택해 주거가 취약한 다양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정책 대응과 조직 복지 지원이라는 현장 활동을 한다. 정책 대응은 홈리스 주거복지정책 등에 대해 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조직 복지 지원은 홈리스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연결해 주는 활동으로, 주거·의료가 필요한 당사자를 상담한 뒤 지원을 제공해 주는 곳에 동행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돕는다. 또한 서울역·용산역권으로 나가서 거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홈리스 야학, 미디어 활동 등도 병행하고 있다.

○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어떤가?



매우 열악하다. 쪽방의 경우 샤워실이 있는 곳은 3분의 1 정도며 세탁장이 설치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곳도 15.6%에 그친다. 여전히 연탄이나 LPG로 난방하는 곳이 많고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맞벽 건축물이 많아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안 된다. 고시원은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빈대의 절반가량이 고시원에서 나왔다. 통풍이 안 되니 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 것이다. 해충으로 피부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고시원 주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다른 고시원으로 옮기더라도 결국엔 비슷한 환경인 경우가 많다.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거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가 약 5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하·옥탑방 등 주거취약 유형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100만 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

“실제로 장애가 있는 한 홀리스가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고 거리를 전전하다가 사망한 처참한 사례도 있었다.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전 설비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필수 가전제품 6종 중 단 한 가지라도 갖춰진 주택은 3.9%에 불과했다.”

량은 수년째 전국 기준 연간 2천 호로 고정돼 있다. 최근 주거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이 연간 1만~1만2천 호 정도라고 하지만 그중 80% 이상이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용자해 주고 민간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를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긴 어렵다.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질은 어떤가.

취약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다. 2020~2023년 서울에 공급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한 홀리스가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고 거리를 전전하다가 사망한 처참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전 설비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가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 냉장고·세탁기 등 6종의 필수 가전제품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2020~2023년 동안 단 한 가지라도 설비가 갖춰진 주택은 3.9%에 불과했다.

○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불안정한 주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

있다. 특히 전세임대의 경우가 그렇다. 계약 기간과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거주 여부가 결정돼 점유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기존에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쪽방 등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유엔이 적절한 주거의 7가지 요소 중 하나로 ‘위치’를 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무리 집이 궁궐 같아도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온전한 의미의 적절한 주거라고 볼 수 없다.

○ 그간 ‘(가칭)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1년간 사업을 시행해 온 만큼 이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다 안정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원대상 기준을 두고 쪽방·고시원·PC방 거주자 등 특정 거처를 일일이 열거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 제정을 통해 비적정 거처의 유형을 정의하고 다양한 불안정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각각 공급 물량의 30%를, 건설임대는 신규·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현행 지침 내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있는 기준에 근거해 법제화하자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 주거 외에 함께 연계해야 할 지원이 있다면.

사람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지 않겠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 지원이 절실하고 정신질환이나 중독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핀란드의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집을 먼저 제공한 뒤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인데, 핀란드는 이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홀리스 수가 감소한 대표적인 국가다. 주거와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더니 결국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종결이 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의료·복지·고용 등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앞으로 홀리스행동의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우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홀리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노력하려 한다. 홀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최근 들어 더 공고해지는 것 같다. 얼마 전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간 거리 홀리스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왜 홀리스들에게 공항을 뺏겨야 하나’, ‘왜 외국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와 같이 공항의 기능 회복과 홀리스의 인권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립이 나타났다. 이를 단순히 공공장소의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빈곤을 잘 다루면서도 어떻게 공공장소의 본래적 기능을 잘 유지할 것인가로 논점을 전환해야 한다. 홀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정을 높이는 것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해나갈 큰 과제인 것 같다. ㉞

황현성 『나라경제』 기자

자립 준비를 기다리기보다 집부터 제공하는 유럽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dylim38@kihasa.re.kr

지난 5월 7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맨 왼쪽)이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노숙인을 위한 알파카투 주거단지를 방문해 입주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오랫동안 노숙인정책에서 주거 제공은 금주나 치료 참여 등 일정한 준비를 마친 사람에게 지원되는 마지막 단계에 가까웠다. 거리에서 바로 주택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 노숙인은 치료 등의 과정을 지속하기 어려워 시설과 거리를 오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실패의 경험만 쌓이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는 이러한 관점을 전환하려는 제도다. 집에서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안정된 집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나 회복, 자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그래서 치료나 금주를 주택 제공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주택을 먼저 제공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주거를 자립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가 하우징 퍼스트 관점을 노숙인정책에 적용해 왔다. 핀란드는 하우징 퍼스트를 국가 노숙인정책의 중심에 놓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나라다. 2008년부터 장기노숙 감소를 목표로 하우징 퍼스트를 본격화하면서 기존 노숙인 시설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바꿨고, NGO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했다. 주택에 들어간 뒤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갔다. 시설에서 노숙인을 일정 기간 보호한 다음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에서, 주택 생활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중심을 옮긴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핀란드의 노숙인은 7,960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3,429명으로 줄었다. 15년 동안 56.9%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장기노숙인은 2008년 약 3,500명에서 2020년 약 1,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흐름이 달라졌다. 감소했던 노숙인은 2024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4,579명으로까지 늘었다. 2025년에만 전년보다 773명, 약 20% 증가했다. 최근 한 연구는 핀란드의 주거비·생활비 상승, 저렴한 주택 부족, 사회보장 축소 등을 그 배경으로 지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하우징 퍼스트의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저소득층이 그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네덜란드는 정신질환·약물 문제를 가진 장기노숙인 중심의 하우징 퍼스트를 노숙인정책 전체의 기본 원리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국가 노숙 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노숙을 종식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시설을 차례로 거친 뒤 마지막에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일반적인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퇴거 위험에 놓여 있거나 시설에서 나온 뒤 주거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까지 대상을 넓히고, 애초에 노숙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거를 확보하는 문제까지 같은 틀에서 다룬다.

그러나 하우징 퍼스트 방식으로 실제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제한돼 있다.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만들려면 지방정부와 주택공급기관이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고 무엇보다 실제 공급할 주택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 사례는 하우징 퍼스트를 확대할 때 어디에서 현실적인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도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에 서비스 결합 지원주택 모델이 제시됐고, 서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유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노숙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하지 않고, 입주 후 생활을 뒷받침할 주거유지서비스 역시 제한적이다. 특히 하우징 퍼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주택은 전국적인 법제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럽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 경험은 거주시설 중심의 지원체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숙인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

‘밑바닥 사정’ 잘 아는 민간과 협업해 현장 파악하고 주거복지센터 확충도



허남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모두를 위한 도시는 있다』 저자
nsheo@khan.co.kr

지난 6월 17일 서울 광진주거복지센터는 노인가구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전문가 현장 주택진단을 실시했다.
© 광진주거복지센터



올해 초 한 70대 노인이 서울 성북구의 한 민간 주거복지단체를 찾아왔다. 그 곳을 찾지 전 그가 보낸 겨울은 혹독했다. TV·선풍기 등 ‘풀옵션’이라고 해서 고른 집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다. 네 가구가 방 하나씩에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었다. 집주인이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샀을 집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버티던 노인은 참다못해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임대주택 혹은 이사비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노인이 살던 집이 ‘충분히 열악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아니었고 최저주거 기준 미달도 아니었다. 다행히 한 민간 복지재단이 노인에게 손을 내밀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집답지 못한 집’에서 당장 꺼내 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을 우리의 공적 지원체계는 왜 품을 수 없었을까? 무엇보다 집답지 못한 집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현장 주거복지 활동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할 지자체에서 지하방·옥탑방 등의 위치를 종종 묻는다고 한다. 쪽방은 쪽방상당소를 갖출 정도로 밀집된 곳에 있지 않으면 그 존재를 모르기 십상이다. 주택이나 상가를 이른바 ‘쪼개기’ 해 만든 사실상의 쪽방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온다.

첫걸음은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최근 「주거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이전 대책 수립과, 지하층·옥상층을 별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치 등의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관건은 이러한 변화가 기초단체 등 실제 주거복지 현장과 밀접한 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성동구는 관내 지하층 주택 3,823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 경사도나 창문 높이 등을 따져 침수 대책이 필요한지까지 파악했다. 이러한 촘촘한 조사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성동구가 지역의 민간 건축사들과 협업했듯이 민관협력이 절실하다. 지역마다 ‘밑바닥 사정’을 잘 아는 활동가,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과의 협력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이미 국회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전국적 확충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기본법」상 광역·기초지자체마다 설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에 70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서울 26개소, 경기 28개소 등 수도권에 쏠려 있다. 주거취약계층이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현장 조사부터 주거상황 대상자 면담과 임대주택·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정책을 밑바닥에서 작동하게 만들려면 주거복지센터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은 그 대안이 될 만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집답지 못한 집에 사는 사람을 찾아 이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그 이후에도 작동해야 한다. 바로 일자리와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이다. 주거취약계층은 자활근로와 무료 급식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이런 서비스에서 멀어질 것을 걱정하곤 한다.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 또한 주거상황 지원사업의 목표가 돼야 한다. ㉮

집-서비스-운영체계 결합된 새로운 주거복지로



하성규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skha47@daum.net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의
의료진들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진료를 하고 있다.

© 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



주거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주거복지정책은 ‘집이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복지·고용 등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집을 잃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여전히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몸 누일 ‘방 하나’가 아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식사하거나 목욕하기 어려운 노인, 집을 마련했지만 돌봄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다시 시설과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에게는 주택과 함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거빈곤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실업과 빈곤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주거불안을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거복지는 ‘집(hardware)–서비스(software)–운영체계(orgware)’가 결합된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먼저 집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어야 한다. 화재와 침수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채광·환기·방음 등이 확보돼야 하며, 병원·복지시설·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공급돼야 한다.

서비스의 경우 그 집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료와 돌봄, 정신건강, 재활, 식사,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활동 등이 주거와 연계돼야 한다. 특히 주거빈곤층 중에 고령자와 장애인, 홈리스 등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집과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운영체계, 즉 행정과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주택·보건·복지서비스가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돼서는 주거취약계층의 복합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를 강화하고, 주거빈곤층의 상황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의 대상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획일적인 자격 기준에 따른 ‘대상 중심’에서 개인과 가구의 위기 정도와 필요에 대응하는 ‘상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긴급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자립주택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도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주거서비스 국가(Housing Service State)’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서비스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주거복지의 목표도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했는가’에서 ‘그 집에서 얼마나 안정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주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이 뿌리 내리는 터전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 필요한 서비스, 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다. 집을 넘어 삶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그것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의 지향점이다. ■

달리는 고시원 안에서 책 읽는 나를 상상한다



동네 도서관에 갈 때마다 주차가 곤욕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의 도서관 주차장은 어느 시간에 가도 자동차로 꽉 차 있어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 나올 때가 많았다. 혼잡한 주차장을 보면서 국내 독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건 가짜 뉴스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책을 사 읽지는 않더라도 도서관에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도서관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혹시, 어쩌면 주차장 자동차의 주인은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일까? 공부하러 도서관에 오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는 않을 텐데... 아니지, 이것도 나의 편견일 수 있지.

의문은 쉽게 해결됐다. 얼마 전부터 도서관 측에서 주차장을 (부분) 유료로 전환했고, 곧바로 빈자리가 많아졌다.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주차를 포기한 걸 보면 근처에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던 모양이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됐다. 모두 다른 곳에다 주차는 잘했을까?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지만, 주차 때문에 고생해 본 사람들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서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날부터 잔뜩 긴장한다. 주차할 곳을 미리 알아보고, 지도로 확인하고, 거리뷰를 보면서 예습한다. 그래도 요즘엔 공유 주차장 덕분에 한시름 놓을 때가 많다. — 출근하면서 비게 된 자신의 주차장을 낮 동안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서울 시민에게 축복을! —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 주차장을 이용한 날이면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기분이 좋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서울 도심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까? 다양한 추측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20~30년간은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모는 차와 자율주행차가 뒤섞이고, 운전하지 않던 사람도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것이다. 당연히 도로는 더 복잡해지고, 주차할 곳은 더 부족해지고, 주차 요금은 덩달아 오를 것이고, 자율주행차는 사람을

목적지에 내려준 다음 주차 요금보다 휘발유가 더 싸다는 판단을 내린 후 하루 종일 도심을 배회하게 될 것이다. 배회하는 차들 때문에 도로는 하루 종일 복새통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혼란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득해질까? 가끔 폭주하는 인간 운전자가 나타나 도로를 마비시킬까? 전문가들의 예측과 무관하게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다. 이름하여 ‘다세대 자동차’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다. 버스와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개별 공간을 마련해 준다. 리무진이나 왜건 같은 자동차를 개조해 옆에 누가 탔는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도 없는, 독립된 공간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움직이는 원룸이라고 해야 할까, 달리는 고시원이라고 해야 할까. 자율주행차니까 운전 기사님을 만날 필요도 없다. 출퇴근 시간이 편해지지 않을까?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시간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미 개발된 것은 아닐까 싶어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국 스타트업 플라이트(Pliyt)가 올 1월 CES에서 공개한 택시 콘셉트가 내 상상과 거의 비슷하다. 202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혼란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달리는 고시원을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책 읽는 나를 상상한다. 



김중혁 소설가
『펭귄뉴스』, 『가짜 팔로 하는 포옹』 작가
popsong7@gmail.com

AI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방향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mrkim@kdi.re.kr

**반도체를 수출해 얻는 이익을 넘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과
산업을 넓혀야 한다. 기업 스스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험하고, 경쟁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 방식이 선택되며,
성공한 방식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유망한 기업과
기술을 대신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해
민간의 다양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야 한다.**

경제는 때로 서로 다른 두 표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지금 한국경제가 그렇다. AI의 발전은 세계의 투자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로 끌어들이며 우리 경제에 보기 드문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해오던 일이 앞으로도 필요할지, 새로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를 묻게 한다. 하나의 기술이 나라에는 호황을, 개인에게는 기대와 불안을 함께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 변화의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글로벌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늘었고,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강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까지 크게 개선되면서 우리 경

제가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은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 나라가 더 많이 벌게 됐다는 사실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간극은 소비에서도 드러난다. 소비는 늘고 있지만 실질소득의 급증에 비하면 증가세가 완만하다. 소비는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항목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 전체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그 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는지가 중요하다.

반도체 수출 증가 속 KDI, 올해 경제성장률 3.2% 전망... 소비, 실질임금,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

먼저 성장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넓게 퍼지지 못하고 있다. 소득 증가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된 반면, 근로자 전반의 실질임금 상승은 제한적이다.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다 보니 높은 성장률도 일자리의 뚜렷한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과 비반도체 제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 국가 전체의 소득이 늘어도 이를 자신의 소득 증가로 체감하기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미래소득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더해진다. 현재의 높은 반도체 수요는 글로벌 AI 투자의 빠른 확대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투자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해 조정되거나 반도체 생산국 간 경쟁이 심화된다면, 우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개인에게는 또 다른 불확실성도 있다. AI가 국가 전체로는 소득을 늘리는 기회이지만, 자신이 해오던 업무를 축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도 안기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소비 흐름을 이러한 불확실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 쓸 돈이 있어도 내일의 소득과 일자리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가계는 지갑을 여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과제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의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자본과 인력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반도체를 수출해 얻는 이익을 넘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과 산업을 넓혀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도 AI를 실제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획일적인 보조금이나 장비 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기업 스스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험하고, 경쟁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 방식이 선택되며, 성공한 방식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유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챗GPT)가 생성한 일러스트.

망한 기업과 기술을 대신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해 민간의 다양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야 한다.

AI 전환에 따른 인력 이동의 기회는 늘리고 위험은 낮추고 한계기업에 묶인 자본과 인력도 풀어야

이러한 변화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일하는 방식과 인력 배치도 달라져야 한다. 모든 기존 업무와 일자리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지키려 해서는 기술 변화가 주는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기업은 새로운 직무를 만들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변화한 생산방식에 맞게 임금체제와 근로형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역량을 쌓고, 기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가 큰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쉽지 않다. 일단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면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높은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에 크게 노출돼 있다. 임금 역시 성과보다는 근속연수에 크게 좌우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근로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업은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며, 청년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동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이동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사회안전망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시간과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실직 기간의 소득 보장과 함께 실제 채용으로 이어

지는 훈련과 재취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본의 흐름도 달라져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유망한 기업을 돕는 것과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장기간 연명시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에 자본과 인력이 계속 묶여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기업이 활용할 자원이 줄어든다. 과거의 고용과 매출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계기업을 떠받치는 것은 당장의 충격을 늦출 수는 있어도 미래의 생산성과 일자리를 희생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원활한 사업 재편과 회생 및 퇴출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방향이다. 기존 기업이 혁신하고, 경쟁력을 잃은 사업은 재편되며,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의 흐름을 열어두는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기업과 일자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일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다. 변화의 비용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글로벌 AI의 발전은 한국경제에 성장의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새로운 활용 방식을 찾고, 노동과 자본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하며, 사회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변화를 가로막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의 창조적 파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150년 전 조선의 개화와 척사의 교훈, AI 시대 우리에게 다시 묻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답을 내놓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빠르게 행정 문서를 만들고 정책을 분석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는 공직자와 인간이다.
AI의 효율성이 인간의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기술의 편리함 때문에 공정과 신뢰, 책임과 같은 사회의 기본 원칙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AI라는 거대한 신문물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AI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AI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과 산업, 교육과 국방까지 AI가 바꾸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150년 전 조선의 모습이 떠오른다. 서양의 과학기술과 새로운 제도가 밀려오던 시절, 조선에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파와 전통적 가치와 국가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파가 있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시 그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

오래전 조선의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던지는 질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19세기 후반 조선의 개화파는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젊은 개화파들은 서양과 일본의 발전된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도 근대국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신문물은 단순히 새로운 물건이 아니었다. 새로운 무기와 통신, 교육과 행정제도, 산업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잃고 외세의 위협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오늘날 AI도 마찬가지다.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공급망, 경제주권을 좌우하는 핵심인프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AI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유행하는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 세계질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

한편 최익현을 비롯한 위정척사파는 외세의 힘이 새로운 문물과 함께 들어오는 상황에서 조선의 전통과 자주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물론 최익현의 주장을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게 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다. AI 시대에는 이 질문이 더욱 중요해진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답을 내놓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빠르게 행정 문서를 만들고 정책을 분석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는 공직자와 인간이다. AI의 효율성이 인간의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기술의 편리함 때문에 공정과 신뢰, 책임과 같은 사회의 기본 원칙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150년 전의 역사를 단순히 개화파는 옳았고, 위정척사파는 틀렸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개화파는 변화하는 세계를 읽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급격한 개혁과 외세 의존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위정척사파 역시 변화의 흐름을 지나치게 거부한 측면이 있었지만 국가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주장을 던졌다.



1898년 서울 동대문 등의 전차선로 및 경원선 공사 사진. 선로 옆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이 나란히 서 있다.
 © 서울역사박물관

개화와 척사의 대립을 넘어 ‘우리의 방식’ 찾아야...

AI 시대의 진정한 개화는 인간을 위한 기술에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개화와 척사의 대립을 넘어 ‘우리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개화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위정척사파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돌아보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AI를 빠르게 받아들이되 우리의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해외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우리만의 기술과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I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되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신뢰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 아래 사용하는가’다.

150년 전 조선이 새로운 문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의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AI 기술을 세계시장에서 경쟁시킬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AI 기술의 호

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만드는 나라, AI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 AI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AI 인프라 확충도, 공공 부문의 AI 전환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일 때 빛을 발한다. 즉 AI 시대의 진정한 개화는 인간을 위한 기술에 있다.

개화파가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다면, 위정척사파는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AI 시대의 대한민국은 이 교훈과 물음에 동시에 답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는 가장 과감하게, 인간의 가치에는 가장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150년 전 조선의 개화와 척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메시지일 것이다. 



김의택
 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해 글로벌 엔터테크 1위가 될 겁니다”

김미희

빅크 대표

2018년 8월호 『나라경제』에서 앱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다. 중국어 회화를 연습할 상대가 없어 답답하던 차에 만난 ‘튜터링’이었다. 앱을 열면 예약 없이도 대기 중인 원어민 교사와 20분씩 1대1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앱을 만든 김미희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UX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사내 공모전에서 탈락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사업을 시작한 3년 차 창업가였다. “지금 창업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를 8년 만에 다시 만났다. 튜터링을 회원 150만 명 규모로 키워 매각하고 2021년 다시 창업한 회사는 빅크(BIGC), 교육이 아니라 K팝과 K컬처를 다룬다.

빅크가 하는 일은 아티스트의 월드투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다. 티켓 판매, 콘서트 실시간 중계, 굿즈 커머스, 팬 투표 이벤트, 팬 데이터 분석

까지 하나로 묶었다. 회사는 이를 ‘올인원 디지털 베뉴(All-in-one Digital Venue)’라 부른다. “아티스트 한 팀이 월드투어를 돌려면 보통 온라인 플랫폼 6~7곳과 계약을 맺고 해지하기를 반복합니다. 그걸 하나로 합치자는 거였죠.” 현재 232개국에서 390만 명이 빅크에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74%가 해외 회원이며 한 번 결제한 사람이 다시 결제하는 비율은 81%에 이른다.

K팝 월드투어 티켓·중계·커머스 한데 묶은 플랫폼…

가입자 전 세계 390만, 매출 3년 연속 두 배 이상 성장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회원 수가 지난 3년간 연평균 700% 넘게 늘었다. 매출은 3년 연속 매년 두 배 이상 뛰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8% 늘어난 112억 원을 기록했다. 프로젝트 하나당 버는 돈의 단위가 달라졌다. “1P 하나당 평균 매출이 몇백만 원 수준이었는데 3년 만에 역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니다. 창업 당시 회사의 미션은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한다’였다. 창업 초기에 여러 분야 창작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수익화하는 모델을 구축했는데 수많은 카테고리 중 유독 한 곳만 폭발했다. “그중 하나가 K팝이었는데 너무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미션의 ‘크리에이터’는 ‘아티스트’로 바뀌었다.

방향을 틀고 나서는 고객이 회사를 이끌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라이브 중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마다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붙였다. 커머스를 붙이고, 티켓팅을 붙이고, 팬 마케팅을 붙였다. 2024년만 해도 매출의 70%가 콘서트 한 건씩 중계를 따내는 계약에서 나왔는데, 지금



은 월드투어 전체를 맡는 통합 계약이 매출의 75%를 차지한다. 배우 겸 가수 박지훈이 좋은 사례다. 단종 역을 맡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모으면서 해외 팬층이 두터워졌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팬미팅은 전석 매진됐고 빅크는 이를 이틀 내내 전 세계로 생중계했다. 또한 지난 5월 도쿄에서 출발해 11개 도시를 방문하는 아시아 팬콘서트 투어 일정 전체도 맡았다. 현지 무대 제작은 로컬 공연사가 하고 기획·연출 총괄은 빅크가 담당했다.

K팝은 김 대표에게 시장이기도 하지만 시험장이기도 했다. “팬들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투표 하나를 열면 전 세계에서 팬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전 세계 언어로 욕을 먹어요.” 팬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빅크 사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다. “튜터링 때는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케팅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 팬을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건 K콘텐츠의 힘이예요. 말이 안 되는 파워입니다.”

전 세계 공연시장 1위인 미국 라이브네이션은 연 매출 35조 원을 달성하고 있지만 사업 축은 오프라인에 있다. “온라인에서 티켓팅과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동시에 제대로 하는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힘은 기술과 팀이었다. 튜터링 시절 개발 총괄이 지금 빅크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기술경영자(CTO)다. 튜터링에서 만든 실시간 통신 기술을 콘서트로 옮겨 중계 지연시간을 0.5초까지 줄였다. 유튜브는 15초쯤 걸린다. “팬미팅에서 아티스트가 말을 걸었는데 20초 뒤에 답이 오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기술력은 트래픽 처리에서도 빛을 발했다. 2023년 대형 K팝 시상식 투표를 맡았을 때 3주 만에 4,500만 명이 몰렸다. 열자마자 1초 만에 300만 명이 투표했다. 서버가 터질 상황을 AI 예측으로 넘기며 서버 비용을 90% 줄였다.

다음 승부처는 글로벌 팬덤 데이터 활용한 ‘엔터 OS’… 음악·공연 분야 투자, 양극화 개선이 과제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4년 동안 15개가 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절반 이상이 죽었다. 지금 살아 있는 건 8개다. 2024년 11월 애플 비전 프로가 한국에 출시되자 빅크는 다음 날 VR 콘서트 서비스 출시 기사를 냈다. “쫄딱 망하고 바로 접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속도를 회사의 체질로 설명했다. “빨리 만들고 빨리 접습니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 소스를 다시 써서 시장이 원하는 걸 빠르게 붙일 수 있는 문화가 돼 있어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분기마다 그대로 보고했는데도 초기 투자자들은 두세 번씩 후속 투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를 마무리했다.

그 자금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부족한 영역을 채우기 위한 인수 작업에 나섰다. 팬덤 커뮤니티 ‘블립’과 K팝 데이터서비스 ‘케이팝레이더’, 그리고 15년 된 음악방송 ‘더

쇼’의 사업권과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인수했다. 케이팝레이더는 5년간 아티스트 800팀을 추적해 13억 건의 팬덤 데이터를 쌓았다. 이 데이터의 활용이 빅크의 다음 승부처다. “월드투어시장이 아직 원시적이에요. 브라질에 몇 석짜리 공연장을 잡을지 현지 에이전트에게 전화로 물어봅니다. 5천 석 규모인데 5만 석을 잡으면 그대로 손실 이잖아요.” 국가별 팬덤 규모를 먼저 데이터로 확인해 위험을 줄이고 10개 도시를 돌린 아티스트에게 팬덤이 있는 도시 20곳을 더 찾아주겠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이 방향을 ‘엔터테인먼트 OS’라고 부른다.

더쇼를 인수한 뒤에는 국내 방송 최초로 애플뮤직 외부 큐레이터 자격을 따냈다. 틱톡과 제휴해 라이브 방송을 동시 송출하자 디지털 시청 지표가 15년 만에 최고치의 50배를 넘었다. 또한 유니버설뮤직그룹과 한국 총판 계약을 맺고 비틀스 서울 에디션 굿즈를 기획해 현대백화점 11개 점포에 깔았다.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새 전체 IP의 50%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에 바라는 것을 물었다. 답은 돈의 흐름이었다. “영화와 드라마는 투자시장이 잘 되어 있는데 음악과 공연 분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거의 없습니다.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콘서트 하나에 수익 모델이 여러 개 걸려 있으니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김 대표는 상위 기획사 몇 곳에 매출이 쏠리고 중간 이자가 무너지는 양극화를 가장 걱정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건 반도체와 K콘텐츠입니다.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M&A시장 문제를 지적했다. 인수합병이 사실상 막혀 있어 엑시트(exit) 경로가 코스닥 하나뿐이고, 그러다 보니 해외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조차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때는 국내 상장기업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적용받는다라는 것이다.

5년 뒤 어떤 회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글로벌 엔터테크 1위”라고 답한 뒤 곧바로 덧붙였다. “아직은 꿈입니다.” 8년 전 첫 창업에 나선 창업가는 이제 두 번째 회사를 글로벌 무대에서 키우고 있다. 첫 창업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 고객을 읽는 눈, 투자자를 설득하는 방식, 좋은 팀을 모으는 역량을 키웠다. 빨리 만들고 빨리 접으며 빠른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빅크가 보여준다. 대기업을 나온 인재가 창업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난 15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성과일 것이다. 빅크가 K컬처와 함께 세계 무대를 디지털로 바꾸는 회사로 자라기를 응원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estima7@gmail.com

수익률보다 오래가는 경제 공부



무더위가 지나며 주식으로 떠들썩하던 분위기도 가라앉은 듯하다. 카페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 주제도 '삼전 닉스'에서 집값과 육아,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들로 돌아왔다. 개인정보 유출이 무섭다며 은행 앱도 안 쓰던 친구 마저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우려스러웠는데, 막상 또 아무도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건 그것대로 섭섭하다. 투자 열기가 식으면 경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멀어지기 쉬워서다.

주변에서 종종 보는 모습이 있다.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너도나도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에는 나도 정말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추천받은 영상과 책으로 HBM은 뒤편 기준금리는 원지 열심히 공부한다. 용기를 내서 주식 한두 종목을 사보지만, 머잖아 가격 조정이 온다. '역시 투자는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며 다음 상승장까지 계좌와 함께 경제에 대한 관심도 달아둔다. 공부의 성과를 수익률로만 채점하니, 주가가 떨어지면 배울 이유도 사라진다.

공부한 내용 뉴스에 비춰보고 실제 투자에 적용해 보기

나의 경우 경제 기자로 일하며 읽은 기사·책·보도자료 등이 지식 기반이 됐지만, 재테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건 뉴스를 보며 내 이해관계와 연결 지어보는 습관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자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자. 반가운 소식이지만 투자자로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고용 호조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내 주식의 가격이나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은 일자리가 늘었구나' 하고 넘길 뉴스에 '그럼 금리는? 지금은 주식을 살 때일까 팔 때일까?' 질문이 따라붙는다.

영어도 단어집만 붙들고 있는 것보다 많이 써봐야 늘지 않던가. '미드'에서 배운 표현을 써먹거나, 여행지에서 문법은 엉망이더라도 느낌만은 원어민처럼 대화를 시도

하면서 말이다. 경제 공부도 배운 내용을 뉴스에 비춰보고 투자 선택에 적용하면서 이해가 깊어진다. 기대한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어디서부터 예상과 달라졌는지 돌아보면 또 공부가 된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 컴백하면 소속사 주가도 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톱스타라 정산 비율이 높아 매출 증가만큼 기업 이익이 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샀는데 작은 손실에도 잠을 설치는 자신을 발견하며 위험 감수 능력을 과대평가한 건 아닌지 살펴볼 수도 있다.

연금계좌 관리를 시작으로 꾸준히 재테크 감각 쌓기

이런 공부를 꾸준히 이어갈 방법 중 하나로, 연금계좌를 관리해 보길 권한다. 15년 전 나의 첫 재테크 경험도 개인 연금이었다. 20년 뒤를 생각하며 상품을 고르니 여러 국가와 산업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수익률이 지지부진하거나 손해를 볼 때도 수령 시점이 한참 남아 있으니 심리적 동요가 덜 했다.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둔 돈이니 매일 수익률로 성적을 매길 필요가 없었다. 매년 꾸준히 세액공제 한도만큼 투자를 이어갔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관리하다 보면 온 세상이 돈 얘기로 떠들썩하지 않을 때도 시장과 산업의 부침을 꾸준히 들여다볼 여유가 생긴다.

재테크 실력은 경제 지식에 투자·소비 습관,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고 자산을 관리하는 성실함이 쌓인 결과다. 주가가 내렸다고 그동안 쌓은 통찰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는 쉬더라도 내 돈과 세상의 관계를 살피는 일은 이어갈 수 있다. 계좌는 덜 열어보더라도,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은 열어두자. 



이현 중앙일보 기자
『금융 프렌즈가 우릴 기다려』 저자
lee.hyun@joongang.co.kr

내가 산 이것의 의미

아마 이번 NOW 기획자가 생각하는 유행과 당신의 유행은 다를 겁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유행을 독점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유행이 파편화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로도 이 같은 현상이 입증됩니다. 이전에는 매출 1천억 원의 대박 브랜드가 나타났다면 요즘에는 200억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죠. 이런 현상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더 심화됩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콘텐츠와 소비재를 추천하다 보니 편향이 증폭됩니다.

이번 NOW에서는 초개인화 시대 나를 위한 소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다뤄봤습니다. 아마 놓친 게 많을 겁니다. 올해 당신의 유행은 무엇인가요?



올해 당신도 여기에 지갑을 열었나요?… 2026년 소비트렌드의 세 가지 장면



이혜원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hlab.lee@gmail.com

**올 상반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AI가 더 이상 신기한 도구가 아니라
공기처럼 당연한 인프라가 됐다는 사실이다.
AI의 파고 앞에서 소비자들은 때때로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무엇을 고를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골랐다.**

트렌드란 소비 가치의 변화, 즉 추세를 나타낸다. 어떠한 유행이라도 문득 솟아나는 법은 없다. 매년 쏟아지는 트렌드 서적이나 자료들이 말하는 것도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완만하게 성장해 온 사람들의 욕망을 짚어내는 일일 뿐이다. 이는 결국 가치가 이동하는 방향이기에 한번 시작된 흐름은 쉽게 끊기지 않고 다음 계절로, 또 그다음 계절로 이어진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 물살이 어느 쪽으로 굽어드는지 그때그때 확인할 뿐이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소비의 풍경은 욕망의 방향을 짚어낸 관찰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 현상으로 보여준다.

올 상반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AI가 더 이상 신기한 도구가 아니라 공기처럼 당연한 인프라가 됐다는 사실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는 AI를 ‘써본다’라고 했다. 이제 AI는 의식조차 못 하게 당연하다는 듯 우리 일상에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았다. AI를 기술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묻게 된다. 성능, 파라미터, 벤치마크로 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의 주인공은 개발사와 엔지니어였다. 요즘 AI 앞에서 마주하는 질문은 결이 달라졌다. ‘이게, 왜 나에게 보이는가’다. 이 질문 앞에서 중요한 것은 노출, 배열, 우선순위다. 이에 답할 수 있는 이들도 엔지니어가 아닌 소비자다. 이제 AI에 대한 화두는 기술의 진화뿐만 아니라 소비트렌드의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AI의 파고 앞에서 소비자들은 때때로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무엇을 고를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골랐다. 그 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었다.

AI가 소비 의사결정 과정을 바꾸다…

AI가 골라주는 제로클릭 소비 vs. 우연히 소비하는 제철코어

첫 번째 축은 AI가 바뀌놓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직접 고르지 않아도 ‘알아서’ 골라지는 소비가 있고, ‘우연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있다.

직접 고르지 않는 ‘제로클릭’ 소비는 정보 탐색, 대안 비교·평가 등 의사결정의 전형적 과정을 굳이 밟을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한 알고리즘은 화면에 원하는 것 혹은 원할 것을 띄워준다. 우리는 그중 하나를 골라 결제하기만 하면 된다. 갈수록 소비자들은 무언가를 ‘고른다’기보다 ‘받아들인다’. 이커머스 매출의 상당 부분이 검색이 아닌 추천에서 나온다는 통계는 놀랍지 않다.

반대로 완벽하게 계산된 것에 대한 반작용도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들은 AI의 정답보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것에서 새로움을 느낀다. 우연에서 도리어 사람 냄새를 감지해 낸다. ‘제철코어’가 그 단적인 예다. 특정 계절에만 반짝 등장하는 음식과 장소와 콘텐츠를 좇는 이 소비는 시간의 흐름 혹은 우연에 따라 눈앞에 나타나는 ‘지금’을 붙잡으려는 감각이다.

다음 축은 준비 여부다. 뭐든지 준비해서 실행하는 것과 오히려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있다. 실패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과 돈을 쓰는 대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그 위험을 줄이려는 ‘레디코어(ready-core)’는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예약 문화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일부 고급 레스토랑의 관행이던 사전 예약은 동네 식당에서도 흔한 시스템이 됐다. 인기 전시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표가 매진되고, 단풍으로 유명한 한 수목원도 정원제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됐다.

건강 역시 일찌감치 관리의 대상이 된다. ‘건강지능(Health Quotient)’은 웰니스가 삶의 목표가 된 시대의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2030 세대도 건강검진을 일상적으로 하고, 잠곡밥을 주식으로 먹으며, 의식적으로 음주를 줄이거나 멈추는 소비 큐리어스(sober curious)를 실천한다.

모든 소비가 꼼꼼한 계산 끝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얼마나 필요한가?’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가?’가 중요한 구

매 기준이 된다. 이른바 '기분경제'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도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거나, 기분을 전환해 주거나, 평범한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 준다면 기꺼이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감각과 취향을 발견하는 방향으로도 확장된다. 향수, 디퓨저, 인센스, 향초 등 '향' 비즈니스의 성장이 이러한 맥락이다. 좋아하는 향을 찾고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 기분을 전환하거나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빠르게 vs. 일부러 느리게, AI 발전이 가속할수록 '나'에 주목하는 사람들

마지막 축은 속도를 둘러싼 두 얼굴이다. 마이크로 트렌드가 무수히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일성과 진품성을 갖춘 근본으로 회귀한다. 마이크로 트렌드의 범람은 픽셀을 닮았다. 찰나에 스치는 유행을 가볍게 탐닉한 뒤 미련 없이 다음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비유할 만하다.

올해 신상품 주기는 무척 짧아졌다. 한 캐주얼 브랜드는 2일 만에 신상품을 소량 생산해 시장 반응을 살핀 뒤, 반응이 좋으면 해외 공장에서 5일 안에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외식업 유행의 회전속도는 더 빠르다. 두쭈꾸, 붐동 비빔밥, 버터떡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호박인절미, 요거트 찹쌀떡, 피자설기까지 하나하나 쟁

겨 먹기에도 바쁘다.

새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빠른 것이 아니라 느린 것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이 무한한 복제를 가능하게 하고 AI가 완벽한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아날로그만이 줄 수 있는 '진짜'를 향한 갈증은 나날이 커진다. 지난해 650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 박물관 방문자 수 3위에 오른 국립중앙박물관은 올 상반기(1~6월) 누적 관람객 수가 이미 380만 명에 육박했다. 또 답십리 고미술상가, 동묘도 20~30대로 북적였다. 근본을 찾는 흐름은 라면, 라디오,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각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변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AI의 발전 속도를 두고 유력 개발사의 책임자들이 잇달아 경고음을 낼 만큼 이제는 제어하기 힘든 수준이다. 역설적으로 이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나'라는 사람을 향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은 한 사람 안에서 아침저녁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걸어가려는 수많은 '나'들의 집합이다. 올해의 소비는 바로 그 무수한 '나'들이 그려내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궤적이었다.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2027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지난 9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을 찾은 관람객들. © 연합뉴스



쉬는 것도 자기관리... '회복'에 지갑 여는 2030



권용훈
한국경제 유통산업부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의 숲속한방랜드. 한때 중장년층이 주로 찾던 이곳에 최근 20~30대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관계자는 “올해 20~30대 고객은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촌과 가까워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데다 최근 러닝과 웰니스가 유행하면서 젊은 손님들의 관심이 커진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목욕탕과 찜질방에 젊은 층이 돌아오고 있다. 사우나뿐만 아니다. 쑥뜸과 마사지, 수면 관리 등 몸을 회복시키는 활동에 돈과 시간을 쓰는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리커버리노믹스(recovery + economics)'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갯생에 지친 2030이 쉬기 시작했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근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은 휴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쉬는 수동적인 휴식에서 벗어나 일과 운동을 다시 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컨디션을 관리한다. 운동과 휴식이 서로 반대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자기관리 과정이 된 것이다.

러닝 열풍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얼마나 빠르고 오래 뛰느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운동 뒤 어떻게 몸을 회복시키는냐로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 달리기를 마친 뒤 사우나를 찾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몸을 푼다. 수면시간을 측정하고 단백질이나 마그네슘 등 회복과 숙면을 내세운 제품도 쟁긴다. '운동→회복→수면→다시 운동'으로 이어지는 회복 루틴이 만들어진 셈이다.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웰니스경제 규모는 2024년 기준 1,193억 달러로 세계 12위다. 2019년 1,049억 달러에서 5년간 약 14% 커졌다. 글로벌 웰니스경제 규모 역시 2024년 6조8천억 달러로 전년보다 7.9% 증가했고 2029년에는 9조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통업계도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웰니스 전문 플랫폼 '올리브베리'를 선보이고 광화문에 이어 강남역으로 매장을 확대했다. 건강식품에 머물지 않고 운동과 수면, 휴식 등 일상의 컨디션 관리와 관련된 상품을 한데 모았다. 웰니스 상품을 처음 구매한 회원 수가 출범 100일 만에 180만 명을



지난 9월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목욕용품점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있는 젊은 소비자들.

넘어섰다. 560여 개 브랜드, 약 1만3천 개 상품이 입점했다. 지난해 수면 관련 건강식품 매출도 전년보다 300% 이상 늘었다.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웰니스 소비가 최신 시설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오래된 목욕탕과 전통시장까지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2030 세대는 때타월과 목욕가방, 사우나 모자 등을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취향을 드러내는 상품으로 소비한다. 최근에는 이런 목욕용품을 사기 위해 남대문시장을 찾는 젊은 소비자도 늘고 있다. 부모 세대에게 몇천 원짜리 생활필수품이었던 물건이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웰니스 상품이 된 것이다.

러닝이 운동화를 패션과 취향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면 리커버리노믹스는 때타월과 목욕가방까지 취향의 영역으로 바꾸고 있다. 프리미엄 웰니스센터와 숲속한방랜드 같은 오래된 찜질방, 쑥뜸방과 남대문시장은 얼핏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 몸의 컨디션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소비 목적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리커버리노믹스는 청년층의 '갯생' 열풍이 꺾인 결과라기보다 그 연장선에 가깝다. 운동과 일을 즐기는 대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수면과 피로 회복에도 시간과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2030 세대의 자기관리 영역이 식단과 운동을 넘어 '회복'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세상 모든 모난 것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수진

맥파이앤티아iger 마케터 겸 모난장 총괄

‘당신은 차 마시는 걸 좋아하나요?’, ‘차를 마시면서 차분해지고 마치 심신이 정화되는 듯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한국의 좋은 차를 소개하는 맥파이앤티아iger는 차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김세미 대표가 차를 마시면서 속이 편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면, 『나라경제』가 만난 김수진 마케터는 누군가 내려준 보이차를 마시며 마음이 개운해지고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고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한다.

차 한 잔의 습관이 창업으로 이어졌듯이, 맥파이앤티아iger가 여는 B급 도예품 판매 장터 ‘모난장’도 나름의 계기에서 비롯됐다. 한 작가의 다기에 검은 점 같은 게 생겨 판매가 어렵다고 SNS에 소개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별자리 같이라며 구매를 원한 것이다. 관점에 따라 어떤 건 B품, 어떤 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별자리가 있는 ‘나’만의 물건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약간의 모남 때문에 쓰임을 잃은 물건들에 쓰임을 연결해 주는 장터가 열렸다.

이들이 모난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나도 괜찮다’는 것. 다만 모난품의 기준이 만만치는 않다. 공예품의 A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킴으로 흠이 생기고 검은 점이 생기면 모두 B품이 된다. 쓰임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곡률, 유약의 흐름 여부 등 조건을 통과하지 못해 작가의 작업실과 창고에 쌓인 물건들이 모난품으로 소개된다.

모난장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브랜드와 협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카페꿈마에서 열린 제5회 모난장. © 맥파이앤티아iger 제공



업한 6팀의 작가들과 작게 열었던 모난장은 올해로 5회를 맞으며 1,200명의 방문객이 찾는 행사가 됐다. 심지어 올해 모난장이 열린 8월 22일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도 방문객이 건물 밖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앞을 지나가다가 긴 줄을 보고 ‘더현대, 한화 풍피두도 아닌데 왜 줄을 섰지?’라는 호기심을 품으며 방문했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모나도 괜찮은, 모난품에 쓰임을 부여하려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가까이 동참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시대적인 트렌드일까? 어느 순간부터 스토리는 모든 곳에 필요해졌다. 이 글의 도입에서부터 게임 플롯, 공산품, 모난품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가격, 비슷한 성능의 두 물건을 비교하면 스토리가 있는 물건에 어쩐지 더 관심이 간다. 김수진 마케터는 스토리를 ‘문’이라고 표현한다. 제품에 대한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어 물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용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것이다. 문을 열었는데 기대와 다른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재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기업의 제품을 믿지 않을 것이다. 신뢰가 깎이는 건 치명적인 일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제품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재구매 요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메시지를 뒷받침할 건 품질이다.

김수진 마케터는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맥파이앤티아iger 부스를 운영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이 많은 도서전에서 잠시나마 마고요히 차 마시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부스 벽면을 가로막았다. 부스 안에서는 ‘과정이 탄탄한 삶’, ‘하루하루 정진하는 삶’ 등 삶의 태도에 맞춰 어울리는 차를 소개했다. 문구에 맞는 차 추천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일회용 잔이 아닌 도자기 찻잔에 시음을 진행해 차 마시는 경험을 완성했다. 이 같은 부스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도 차가 주는 효과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의 노력은 입증되고 있다. 회사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모난장과 함께하는 작가와 방문객 모두 늘고 있다. 또 최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맥파이앤티아iger의 카페인 없는 차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로도 연결되고 있다. 올리브영이 만든 웰니스 마켓 올리브베러의 차 관련 섹션에도 입점하게 됐다.

끝으로 김수진 마케터는 모난장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도 잠든 모난품이 더 있을 것 같이라며 다양한 작가들과 쓰임을 잃은 물건들이 쓰임을 만나는 장을 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넓은 곳에서 모난장을 열어 프로그램이나 토크 세션도 추가해 모두가 모난장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제 같은 행사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어쩌면 모난장이 평범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

정서현 『나라경제』 기자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AI 초개인화 시대를 건너는 방법



황성걸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산업미술대학원 원장
gulhwang@gmail.com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가만히 반추해 본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개인의 내밀한 행복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원론적인 취합이자 타협의 산물이었다. 평균치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뾰족하고 뜨거운 취향은 둥글게 마모됐고 우리는 타협된 결과물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시대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글로벌 정보와 자산이 빠른 속도로 유통되면서 점차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취향과 선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순작용만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 일상은 마치 잘 연출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착시에 빠지기 쉽다.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눈앞에 대령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깊이 각인된 좋은 추억들은 대개 예측 가능한 선물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는 후불제인 경우가 많다. 험덱이는 숨을 내쉬며 고단하게 산을 오를 때는 그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밀려오는 벅찬 보람을 큰 선물로 받고 그때 찍은 사진을 평생 보관하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과거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처럼 사업적 성장을 위해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우선시하기보다 단기적인 행동 유도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음의 역설이 브랜드 관리 차원으로 넘어오면 더욱 복잡한 딜레마를 낳는다. 오랜 시간 소비자 곁에 머물며 높은 경지의 사회적 인지도를 쌓아 올린 브랜드는 그 자체로 개인의 판단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긴 세월 축적된 굳건한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부정적 의견(VOC)이나 다른 취향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브랜드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즉각 수용할지 매번 숙고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감성적 가치가 높고 깊은 철학을 가진 브랜드일수록 즉각적인 표면적 반응보다는 심층적 니즈를 캐묻기 위해 오히려 대응을 지연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당장의 ‘초개인화’만

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유산 차원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변화와 개인의 취향에 너무 기만하게 반응하는 것이 때로는 브랜드의 절대적인 가치를 희석시키는 독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의 뾰족한 불호를 없애려다 브랜드에 열광하던 맹렬한 ‘호(好)’마저 함께 사라져 버리는 미미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나이키 리테일의 경우 소비자 직접판매 가속화 전략(Consumer Direct Acceleration)을 통해 통합형 디지털 앱을 중심으로 글로벌시장의 원론적 통합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역별 리테일의 상향식(Bottom-up) 특성과 소비 경험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이중고를 겪게 됐고, 이러한 사업 논리에 기반한 채널 전략의 한계가 최근 주가 하락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AI의 눈부신 활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초개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인지도가 누적된 브랜드의 입장에서 최선 솔루션의 무조건적 수용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특히 AI 백엔드에서는 개혁적인 모듈을 활용하면서도 고객에게는 점진적인 경험으로 조율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고유의 굳건한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머신러닝을 우선시하는 ‘필터’ 구축이 AI 경영관리의 핵심이다. 지능적 시대가 건네는 초개인화라는 달콤한 혜택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개인’, 즉 타깃 고객(Target Segment)을 보존하고 우대하면서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AI 시대의 명암 속에서 장기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나이키 매장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 © 연합뉴스



경제교육 활성화와 확산에 공헌한 학교, 교사, 경제교육단체와 종사자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안내



2026. 9. 1. (화) ~ 10. 19. (월) 16:00까지



응모 자격

2년 이상 경제교육을 수행한 단체 및 개인

단체 전국 초·중·고등학교 / 경제교육단체

개인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 경제교육단체 종사자

시상 부문

단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상(300만 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200만 원) 등

개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상(200만 원)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150만 원) 등

※ 심사를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부문을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

2026. 9. 1.(화) ~ 10. 19.(월) 16:00까지

공모 방법

신청서 이메일 접수(econkorea@kdi.re.kr)

수상자 발표

2026. 11. 18.(수) 예정

문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시민사회교육팀
044) 550-4614, 4027

유희 국유지 활용해 청년기숙사 공급한다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강경구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장
ecokang99@korea.kr

국유재산의 진정한 가치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것은
‘보유한 자산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국가’다. 수익성이 높은
재산에서는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유희 재산에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를 만들어내며, 전략산업과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는 토지와 건물은 물론 정부가 보유한 증권까지 다양한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그 규모는 1,403조 원에 달한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공동재산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국가가 보유한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되고 새로운 편익과 수익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국유재산의 가치는 커진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 1,403조 원…

노후 청·관사 200곳 개발하고 공공주택 2만8천 호 신속 공급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했다. 그간 국유재산정책이 소유와 보존, 관리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재산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마디로 ‘보유하는 재산’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산 활용, 미래성장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를 추진한다. 기존의 기금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해 자산가치를 높인다.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통합지침도 마련해 국유재산 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지역의 노후 청·관사 약 200개소를 개발하고,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주요 거점 14곳에서는 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과 개발 방식, 건물의 기능을 다양화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부동산뿐 아니라 자금과 정부 보유지분의 운용도 고도화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출자기관 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유재산을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천 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유희 국유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천 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유희 국유지를 세대별 수요에 맞춰 주거 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삶과 가까운 곳에서 국유재산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주거뿐 아니라 생업과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확충한다. 폐파출소 등 유희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청년·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희 부지를 활용한



지난 3월 11일 촬영한 남원시 청년제과점 '동파' 내부. 옛 차안센터 건물을 활용해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베이커리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 남원지역자활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현재 12개에서 2029년까지 72개로 확대한다. 유휴 재산을 필요한 곳에 연결해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국가 전략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특례 지원 확대하고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특화된 AI 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혁신

셋째, 미래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활용도 강화한다. AI·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 특례 지원을 확대한다. 동시에 국유재산 특례 존치 평가를 통해 자체 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원을 정비하는 등 특례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K콘텐츠산업에는 제작에 적합한 국유재산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용료를 감경 특례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유지 임대료 경감도 확대하고, 재정경제부와 산림청 간 국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재산은 산림보전에 활용한다. 수원·천안, 서울 영등포·강남 등에는 청년창업공간을 확대하고 국유농지를 활용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의 혁신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DB와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

다. 부동산 중심으로 부처와 회계별로 분절돼 있던 기존 관리체계를 넘어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자산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휴 행정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용도폐지권을 강화하고, 청·관사 등 공용재산의 신규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는 갱신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향후 3년간(2026~2028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2029년부터는 기존 5년 주기로 시행했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AI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적극적인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확한 재산정보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것은 ‘보유한 자산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국가’다. 수익성이 높은 재산에서는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유휴 재산에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를 만들어내며, 전략산업과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유재산의 진정한 가치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유재산을 ‘보유하는 재산’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이다. 

모두가 책임 주체...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윤리원칙 확정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wschoi2512@korea.kr

양기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gimun@kisd.re.kr

최근 AI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일상과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재난, 고령화,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과도한 의존과 인간 자율성 약화, 학습 데이터와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일자리 변화, 허위조작정보 확산 등 새로운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채용이나 평가와 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단의 영역에서 AI와 사람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AI의 편익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우려와 위험을 해소·완화하고,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0년에 마련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지난 8월 개최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 규범으로 공통의 가치와 원칙 제시... AI 개발·활용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별로 역할 나눠서 안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의 개발과 활용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법정부적·범사회적 원칙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며 각 분야에서 마련되는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이다. AI를 둘러싼 다양한 물음에 일률적인 답을 정하지 않는다. 대신 관련 주체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따라서 개별 분야의 세부 행동기준보다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기준과 방법은 이를 토대로 마련되는 분야별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가치는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사회의 공공선'은 AI의 편익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 편익을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미래를 지향한다.

7대 원칙은 3대 가치를 AI 생애주기 전반에서 구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공통 원칙이다. 먼저 '인간중심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원칙은 사람의 주체성과 권리에 관한 원칙이다. 인간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선택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이 그 동작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

[3대 가치]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점

인간의 존엄성 Human Dignity



사회의 공공선 Common Good of Society



인류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7대 원칙] 3대 가치를 AI 생애주기 전반에서 구현하기 위해 AI와 관련된 모든 주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공통 원칙

인간중심성 Human-centeredness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되도록 구현·이용, 과의존 경계

프라이버시 보호 Privacy Protection

개인정보 최소 활용,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공정성·포용성 Fairness and Inclusiveness

공정한 접근, 편향 방지, 취약계층 참여·활용 보장 노력

책임성 Accountability

개발·활용 시 각자의 책임 명확화 노력, 피해 구제까지 고려 필요

안전성 Safety

AI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이용 노력, 안전조치 마련

신뢰성 Reliability

이용 목적에 맞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게 하고, 안정적 작동 관리, 목적에 맞는 이용

투명성 Transparency

AI의 적용 여부와 판단 기준, 위험성 등을 투명하게 제공 노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부당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며, 공정성·포용성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과 기회를 공정하게 누리고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책임성'과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원칙은 AI가 책임 있게 개발·활용되기 위한 조건을 다룬다. 책임성은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실질적 피해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며, 영향력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안전성은 사람의 생명, 신체, 정신적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 수준에 맞는 안전조치로 오남용이나 외부 공격에 대비하며 사회적 차원의 위험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안전성이 AI로 인해 사람과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살피고 대비하는 원칙이라면, 신뢰성은 AI의 결과가 사람의 권리와 중요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목적과 활용 맥락에 맞는 최소한의 성능과 안정적인 작동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같은 오류라도 단순 편의 기능과 사람의 권리나 안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AI가 의도된 목적과 허용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용되는 동안 성능과 작동 상태를 지속 점검하는 것도 신뢰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AI 활용 사실과 수준·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판단 기준과 위험 수준을 공유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AI 윤리의 주체는 공급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용자는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학계·시민사회까지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갖는다. 윤리원칙은 각 원칙의 설명과 함께 주체별 역할을 나눠 안내한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보유한 주체가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산업·시민사회·학계·국민 등 목소리 담아 153건 의견 수렴… 해설서·자율점검표·교육콘텐츠 보급해 현장 실천 뒷받침

범정부적·범사회적 원칙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 12월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작업반과 자문단 운영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9일 공개했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8월 14일 대토론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총 153건의 의견을 검토한 뒤 공통으로 제기된 내용은 정제해 반영하고 상충하는 의견에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원칙을 마련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원칙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AI 생애주기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윤리원칙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취지와 내용은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유하며 AI의 혜택이 인류 전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진정한 가치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 모두가 윤리원칙을 실천할 때다. 

AI는 행정을, 사람은 구직 상담을... 고용센터 30년 만에 바뀐다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이병성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bslee2032@korea.kr

AI를 활용한다고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올해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1인당 상담 시간은 기존 18분에서 73.8분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참여자의 8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혁신에서 AI의 역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지금 하는 일이 5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까.’

AI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 떠올려 봤을 질문이다. AI와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의 내용과 필요한 역량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평생 한 직장, 한 직업에 머무르기보다는 여러 차례 일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역량을 익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다.

**고용24 마이페이지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하고
개인 경력, 역량, 취업 목표에 따라 필요 서비스 통합 제공**

인구구조 변화도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커지고 있다. 산업 전환의 충격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고용정책은 ‘실직한 뒤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변화에 앞서 경력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이 역할의 최일선에 있는 곳이 전국 102개 고용센터다.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고용센터를 찾는다. 하지만 정작 현장 직원들은 사람보다 서류를 더 많이 마주해 왔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해야 하고, 각종 지원금 심사·지급과 민원 처리까지 담당한다. 구직자를 깊이 만나 경력을 함께 설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고용센터가 ‘일자리를 연결하는 곳’보다 ‘급여를 받으러 가는 곳’으로 인식돼 온 배경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은 바로 이 구조를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AI와 디지털 기술에 맡기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은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급여와 행정 중심의 고용센터를 상담과 취업·채용 지원 중심으로 바꾸고, ‘졸업에서 은퇴까지’ 국민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구직자가 받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절차와 서비스를 여러 구직자에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경력과 역량, 취업 목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고용24(work24.go.kr)의 마이페이지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하고, AI가 개인의 경력과 설문정보 등을 분석해 ‘스스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자’와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를 구분한다. 자기주도형 구직자는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구직자는 전담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가 1대1 심층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 이후 경력개발까지 함께한다. 지금까지 구직자가 여러 사업과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AI를 활용한다고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1인당 상담 시간은 기존 18분에서 73.8분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참여자의 8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간을 줄이자 상담사가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혁신에서 AI의 역할은 사람을 대



지난 7월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 © 연합뉴스

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도록 돕는 데 있다.

기업엔 채용공고 작성부터 입사 이후 적응까지 토털케어 제공... 지역 일자리 문제는 지역에서 풀도록 지방청 권한 확대

기업지원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고용센터의 기업지원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왜 사람을 뽑지 못하는지부터 살핀다.

고용24의 구인정보와 고용행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산업단지 등 현장을 찾아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먼저 발굴한다. ‘고용24 Firm Care AI’를 활용해 채용 애로가 채용공고와 선발 방식의 문제인지, 임금·근로시간·작업환경 등 일자리 여건의 문제인지, 적합한 인재 부족 때문인지를 진단한다. 채용공고 작성부터 근로환경 개선, 적합한 구직자 추천, 실제 채용과 입사 이후 적응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가 목표다.

구직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기업의 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내고 기업의 채용 여건을 개선해야 구직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다. 고용센터가 구직자와 기업 양쪽을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지역 고용정책도 중앙에서 정해진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산업구조와 인구, 일자리 문제는 지역마다 달라 똑같은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청은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산업·고용 상황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노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일자리정책을 직접 기획·조정한다. 지역 여건에 따

라 기존 사업의 요건이나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역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비스만 바뀌서는 충분하지 않다. 고용센터가 정말 사람을 만나는 조직이 되려면 일하는 방식과 사람, 조직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위탁기관 관리와 복합민원, 부정수급 처리 등은 광역 단위에서 통합하고, 지원금 신청·심사·지급은 행정정보 연계와 AI를 활용해 최대한 자동화한다. 현장 직원은 그만큼 상담과 취업·채용 지원에 집중한다. ‘상담’ 직렬을 ‘고용서비스’ 직렬로 개편하고 AI·데이터 활용, 심층상담, 기업 HR 컨설팅 등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평가기준 역시 단순히 몇 건을 처리했는지보다 구직자와 기업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중심으로 바뀐다.

이번 고용서비스 혁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올해 과제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일부 권역에서 혁신과제를 통합해 시범운영하고,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있지만 국민의 ‘일할 권리’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변화가 빠를수록 국가 고용서비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길을 찾도록 돕고, 새로운 일을 고민하는 중장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잠시 방문하는 곳을 넘어 국민이 일하는 동안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동반자’가 되는 것. 그것이 30년 만에 시작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이 지향하는 모습이다. 

OECD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루지는 정책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높아진 유럽 식탁의 문턱,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면

EU는 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출국이자 시장이다. 지난해 EU 농식품 수출의 61%, 수입의 57%가 FTA 상대국과 이뤄졌을 만큼 FTA는 EU 농식품 교역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FTA에서는 농산물시장을 열어줬던 EU가 관세 인하와는 별개로 엄격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동물용 의약품 규제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을 만들었다.

최근 EU 농업계에서 내는 성명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올해 유럽의 여름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 맹렬한 산불이 이어지는 등 유난히 뜨거웠다. 기후위기가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농업 생산량과 소득을 흔드는 상수가 되면서 농업인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두 번째는 농산물시장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다. 미국발 통상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EU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EU 농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수입 농산품에 EU 기준 요구하는 ‘거울 조치’ 적용... 브라질, 항생제 사용 규정 미준수로 EU 육류 수출 막혀

EU는 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출국이자 시장이다. 지난해 EU 농식품 수출의 61%, 수입의 57%가 FTA 상대국과 이뤄졌을 만큼 FTA는 이미 EU 농식품 교역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EU가 FTA 확대를 통해 수출시장을 넓히는 것은 유럽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FTA를 바라보는 농업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최근 EU가 FTA 협상을 타결한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EU 입장에서 농업 부문의 민감도가 매우 높다. 특히 메르코수르는 EU가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저비용 농축산물의 대규모 생산·수출 지역인 만큼 EU 내부에서 논란이 컸다. 그 민감성을 보여주듯이

지난 1월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앞에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1999년 협상이 개시된 이후 최근의 정치적 합의까지 약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고, EU는 정식 비준에 앞서 무역 분야의 합의사항을 따로 분리해 올해 5월 1일부터 잠정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EU 농산물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이 긴 여정의 끝을 환영했던 메르코수르 국가들, 특히 브라질의 기대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예상치 못했던 EU 수입 농산물 규제에 직면해 실제 수출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FTA에서는 농산물시장을 열어줬던 EU가 관세 인하와는 별개로 엄격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동물용 의약품 규제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을 만들었다. 이는 일명 거울 조치(Mirror Measure)로 수입품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EU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EU 법률상 일방적 규제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이 직면한 항생제 사용 규제다. EU는 지난 9월 3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규정」에 따라 EU에서 금지된 항생제의 사용 제한을 EU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입 조건[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2598]을 전면 시행했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EU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반입이 가능한 제3국 목록을 발표했는데 브라질은 항생제 사용 규정 미준수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25년의 지리한 협상 끝에 EU 시장 접근을 확대한 브라질로서는 핵심 수출품인 쇠고기와 가금육이 비관세 요건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브라질산 꿀과 가금류는 규정 시행일인 9월 3일을 갓 넘겨 긴급 감사를 끝내긴 했으나 EU 회원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수출 재개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쇠고기는 계속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브라질은 육류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이 적시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균형 잡힌 무역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예컨대 EU산 유제품 및 올리브유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등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물론 이 사례를 두고 브라질의 식품 안전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브라질이라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EU의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에 있다. EU는 단순히 수입품의 '최종 제품'에서 잔류 물질이 검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EU 시장에 들어오는 식품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됐는지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EU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 동물복지와 같은 기준들도 강화되는 등 EU의 규제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선진 농축

산물 수출국 역시 EU의 규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다.

수입 규제 강화엔 EU 농업계 불만 해소 목적도 있어… 농약 MRL 개정 시 제3국 농업계엔 생산비 증가 우려

이러한 EU의 수입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적은 EU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EU의 안보와 경쟁력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가 높아지자 EU 공동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농업 부문의 지원 규모가 줄었다. 이에 터져나올 농업계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 부문에서 EU의 생산 방식과 기준을 제3국에 요구하는 통상정책 활용은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 2기가 출범한 2024년 말 이래로 강화돼 왔다. 2024년 초부터 유럽의회 선거를 계기로 EU 농업계는 엄격한 환경 규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를 지적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응해 EU 집행위는 회원국, 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EU 농업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를 출범시켰다.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는 무역 개방성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조화시키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기준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무역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EU 소비자의 기대치를 최대한 고려해 수입 제품을 EU 식품 및 농업 표준에 부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후속 조치로 EU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은 2024~2029년의 정책 핵심 우선순위로 수입품 통제 강화 및 공정 경쟁 확보를 제시하고 실제 입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식품 및 사료 안전 옴니버스 패키지다. 이 규제 정비 패키지의 기본 목적은 EU의 식품, 사료 안전 관련 법령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EU에서 금지된 농약이 수입품을 통해 재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위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 농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정량 한계(실질적으로 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지하수나 꿀벌 등 수분매개자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환경적 기준까지 고려해 대상 농약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특정 농약의 EU 내 승인 여부나 환경적 고려가 수입품의 생산 방식과 시장 접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EU와 다른 규제체계를 가진 교역국에서는 상당한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EU 공동연구센터(JRC)의 영향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개정안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18종의 농약은 235개 품목과 86개 수출국에 영향을 미치며, 제3국에 EU가 승인한 대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생산 비용은 약 20~40% 인

상된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제3국들은 한목소리로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EU 농식품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은 MRL 개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입 허용 기준 설정의 기본 원칙과 WTO SPS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농산물 무역을 제한하고 다자간 무역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인들의 도구를 축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대상 농약들은 이미 수출국에서 안전성과 합법성이 검증된 도구이며, 농약은 국가별·지역별 해충 문제와 농학적 조건, 계속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맞춰 설계되는데 EU가 일방적 기준으로 MRL을 0으로 낮추거나 철회하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수 대응 도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확량 감소, 해충 발생 및 전 세계 식량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결국 최종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식품 안전에서 식품 사슬 전반으로 규제 영역 넓어져 원료 → 패키지까지 농식품 체인 전반에서 대응할 필요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는 식품 안전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 사슬 전반에서 지속 가능성 전환을 유도하며 수입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어떤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했는지, 원료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공급망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생산국의 환경·사회적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최종 제품이 어떤 포장재에 담겨 유통되는지까지 규제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수입 식품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비EU 회원국 대상 농식품 체인에서의 감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 EU의 식품 및 수의품 감사 계획을 보면 회원국 대상 감사 비중은 45%로 이전보다 감소한 반면, 제3국 현지 감사 횟수는 2025년 대비 두 배 이상(107%) 늘고 국경 검사도 60%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식품 규제 방향이 EU 역내에서 제3국 수입 관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농업 통상정책 변화에 맞춰 EU 규제가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제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기업들도 제품 설계 단계에서 원료부터 용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슬의 관점에서 EU 규범의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EU의 규제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은 대표적인 농업환경 규제지만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의 한 협동조합은 선제적으로 물류·인증 기관 및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하는 등 EUDR을 적극 활용해 EU 수출량이 20% 증가했다. 또한 위치 추적성이 인증된 원두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는 등 이를 수익성 제고의 기회로 삼고 있다. EU 농업통상 여건과 규제 방향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조은지

주벨기에EU대사관 겸 주NATO대표부 농무관
ejcho24@mofa.go.kr





부상하는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홍콩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형 메모리 제조기업에는 중국 내 정책 방향과 투자자 기반이 긴밀하게 연결된 본토시장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반면 홍콩은 이미 본토에 상장된 기술기업의 홍콩 증시(H주) 추가 상장, 외화 조달과 국제 기관투자자 유치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중국과 홍콩의 자본시장은 대체재 관계라기보다 각자 역할을 달리하는 ‘이중 금융 인프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말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고대역폭메모리 HBM3E를 소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티헤드(T-Head)와 중국 AI 반도체기업 캄브리콘이 HBM3E와 자사 프로세서의 호환성을 시험 중이며,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관련 제품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CXMT와 고객사가 생산량, 수율, 세부 사양이나 인증 진행 상황을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본격적인 양산으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다. 그럼에도 이 소식은 중국 메모리반도체산업의 성장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 D램의 CXMT와 낸드플래시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생산 능력 확대와 제품 고도화,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메모리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AI 수요 확대로 연산용 반도체뿐 아니라 HBM,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 중국의 기술 추격과 자본 확충이 함께 가속되고 있다.

D램 세계 4위 오른 CXMT, HBM3E 생산하며 추격… IPO로 최대 666억 위안 조달해 장기 투자 기반 확보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는 CXMT의 경우 D램 분야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이 회사는 2019년 8Gb DDR4 제품을 출시해 중국 본토에서의 D램 양산을 본격화한 뒤 DDR5와 저전력 모바일용 LPDDR5·LPDDR5X 등으로 제품군을 넓혀 왔다. 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신

청서 기술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 기준 세계 D램시장 점유율 7.67%로 중국 1위, 세계 4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합계 점유율이 90%를 넘는 고집중 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의미 있는 네 번째 사업자로 부상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범용 D램 점유율 상승이 HBM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실리콘관통전극(TSV) 등으로 연결하는 제품으로, 미세 공정뿐 아니라 적층·패키징, 수율 안정화, 고객사 인증 등이 함께 요구된다. CXMT의 HBM3E 소량 생산과 중국 AI 칩 기업들의 시험은 중국 내에서 'AI 칩-HBM-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 한 가지, 시제품 또는 위험생산(risk production) 단계에서 안정적인 대량 납품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HBM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추격이 현실화되고 있기는 하나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리더십이 단기간에 역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CXMT 등이 범용 D램시장을 중심으로 예전보다는 커진 존재감을 보여줄 가능성은 분명하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HBM, 서버용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기업은 DDR5와 모바일용 LPDDR 등에서 내수 수요를 흡수하며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자국 스마트폰·PC·서버에 채택될 수 입대체 효과를 낳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범용 메모리 가격과 글로벌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의 기술 추격 뒤에는 막대한 자본이 있다. 지난 7월 27일 CXMT가 상하이 증시 과학기술혁신판(커창반, STAR Market)에 상장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상장 공고에 따르면 공모가는 주당 8.66위안, 초과배정 옵션 전 신주 발행량은 약 66억9천만 주, 기본 공모 조달액은 약 579억 위안(약 12조6천억 원)이었다. 초과배정 옵션이 모두 행사될 경우 총조달액은 약 666억 위안(약 14조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올해 아시아 최대 IPO이자 중국 본토 증시(A주) 상장 반도체기업 중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됐다.

CXMT의 IPO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 충분했고 실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증시의 관련 종목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요하게 볼 부분은 IPO 조달액 자체보다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계획'이다. CXMT가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모집 자금 투자계획은 총 295억 위안으로 메모리 웨이퍼 양산라인 개선 75억 위안, D램 기술 고도화 130억 위안,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90억 위안으로 구성됐다. 실제 공모액이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돈 것은 AI 메모리 호황과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투자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도체산업은 공장 건설과 장비 도입 이후에도 수율 안정화와 세대 전환

CXMT 상하이 증시
상장(7월 27일)
기본 공모 조달액

579억 위안
(12조6천억 원)

CCSH 상하이 증시
IPO 신청(8월 21일)
목표 조달액

330억 위안
(6조8천억 원)

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번 상장은 CXMT가 정부기금과 지방정부 지원을 넘어 공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장기자금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서는 YMTC의 약진과 상장 추진이 주목된다. YMTC는 메모리 셀과 주변 회로를 각각 다른 웨이퍼에서 만든 뒤 결합하는 독자적인 '엑스태킹(Xtacking)'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YMTC는 올 2분기 세계 낸드 비트 출하량의 14%를 차지해 처음으로 세계 3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267단 3D 낸드를 양산하고 300단 이상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MTC의 지주회사인 창장춘추출딩스(CCSH)는 지난 8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창반에 IPO 신청을 접수했다. 목표 조달액은 330억 위안(약 6조8천억 원)으로 생산라인 개선에 208억 위안, 차세대 낸드 및 고속 저장제품 R&D에 122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CXMT와 YMTC라는 중국 메모리 양대 기업이 모두 공개 자본시장을 통해 수백억 위안의 투자자원을 마련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고강도 규제가 중국의 기술 추격을 늦추는 동시에 국산화 투자를 재촉하는 역설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YMTC는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됐고, 미국은 2024년 말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AI 연산에 필수적인 HBM까지 통제를 확대했다. 자본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첨단 노광·식각·증착·검사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제약은 돈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이 제약은 핵심 소재·장비 국산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을 더욱 집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CXMT, YMTC가 홍콩 대신 상하이에 상장한 이유는?... 홍콩 증시, 국제 자본의 평가 보여주는 시험대

CXMT와 YMTC의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두 회사가 선택한 상장시장이 홍콩이 아니라 상하이라는 점이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형 메모리 제조기업에는 중국 내 정책 방향과 투자자 기반이 긴밀하게 연

결된 본토시장이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홍콩은 이미 본토에 상장된 기술기업의 홍콩 증시(H주) 추가 상장, 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기업의 IPO, 외화 조달과 국제 기관투자자 유치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중국과 홍콩의 자본시장은 대체재 관계라기보다 각자 역할을 달리하는 '이중 금융 인프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 IPO시장 회복이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상장은 87건, 조달액은 2,124억 홍콩달러(약 37조 8천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94% 증가해 홍콩은 상반기 IPO 조달액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이러한 IPO시장 호조 배경으로 AI를 포함한 기술·미디어·통신 기업의 상장 증가를 지목했다. 홍콩은 지난해에도 119개 기업의 신규 상장을 통해 2,858억 홍콩달러(약 53조 원)를 조달해 세계 IPO시장 실적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그 모멘텀이 올해 중국 기술기업의 상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버·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인터페이스 반도체를 설계하는 몬타지테크놀로지다. 상하이에 이미 상장돼 있던 이 회사는 2월 홍콩에서 H주를 추가 발행했고 초과배정까지 반영한 순 조달액은 약 79억 2,400만 홍콩달러(약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회사는 이를 R&D와 상용화, 전략적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반도체 설계기업 옴니비전도 1월 홍콩에 2차 상장을 하며 48억 홍콩달러(약 8,300억 원)를 조달하고 자금의 약 70%를 R&D에 배정했다. 이 밖에도 올 초 비런테크놀로지, 일루바타코어엑스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잇달아 홍콩시장을 활용했다.

홍콩의 금융 기능은 단순히 상장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홍콩 상장은 달러와 홍콩달러 기반의 국제 투자자금, 글로벌 투자은행의 기업가치 평가와 주관 역량, 초석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영문 공시와 국제 회계·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상하이·선전-홍콩 주식시장 교차거래 제도인 후강통(滬港通)·선강통(深港通)은 본토 투자자가 홍콩 상장 중국기업에 투자하고 국제 투자자가 홍콩을 통해 중국 자산에 접근하는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과거 중국기업의 국제자본 조달에 미국 상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미중 금융·기술 갈등이 심화된 현재 홍콩은 중국기업이 국제적 가격 발견과 외화조달 통로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치가 커졌다.

물론 홍콩이 중국 반도체 자립의 만능 자금줄인 것은 아니다. 국제 투자자는 정책 목표보다 수익성과 지배구조, 제재 노출, 기술의 상업성을 중시하며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밸류에이션과 투자수요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 상장으로 현금을 확보한다 해도 첨단장비 도입 제한이나 고객 인증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 첨단산업의 가능성뿐 아니라 시장의 우려도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시험대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의 공모수요, 초석 투자자 구성, 상장 후 주가와 조달 자금 사용처는 중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제자본의 평가를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된다.

중국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 가능케 하는 공통기반, 미국 규제 강해질수록 공급망 안전 위해 국내 양산할 것

중국 정부의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은 이 같은 기술과 자본의 결합을 이해하는 정책적 틀로 볼 수 있다. 부동산·저임금·대규모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던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첨단제조·고급인력·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ی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와 제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를 신항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집적회로·공작기계·첨단계측기·기초 소프트웨어·첨단소재·바이오·제조 등 중점 분야에서 전사체에 걸친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주된 방향으로 제시했다.

신질생산력 개념에 비춰볼 때 반도체는 단순히 하나의 유망산업이라기보다 다른 첨단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반에 가깝다. AI, 전기차, 로봇, 차세대 통신과 스마트 제조는 모두 연산·메모리·센서·전력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중국 정부가 AI의 산업 적용과 반도체 자립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응용시장이 중국의 국산 칩과 메모리 분야에 초기 수요와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고, 다시 AI서비스와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순환구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 공급체계 역시 다층적이다. 중국은 2024년 등록자본 3,440억 위안(약 73조 원) 규모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자금 3기를 출범시켰다. 앞선 1·2기 기금보다 큰 규모로 조성됐고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주요 국유은행들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여기에 중앙·지방정부의 산업기금, 국유은행, 커황반, 홍콩 IPO가 더해진다. 국가가 모든 투자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자금이 초기 위험을 분담하고 자본시장이 후속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중국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급망 안전을 위해 국내 반도체 양산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메모리기업의 성장은 단순한 뉴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이 아니라 경제성과 함께 안보와 자립을 중시하는 새로운 공급처의 등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圖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책임연구원
jspark15@korea.kr

독일 빵에 버터를 발라



운 좋게 독일을 단체로 여행한 적이 있다. 내 임무는 맛있는 음식을 적절히 골라 제안하는 것이었다. 다들 유명 셰프가 골라주는 독일 음식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온갖 소시지를 굽고 삶아 내는 맥줏집, 삼겹살을 구워 파는 전통 식당(삼겹살은 한국인이 제일 많이 구워 먹지만 독일도 더러 파는 집이 있다)은 일행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내게는 비장의 무기도 있었다. 빵이었다. 독일은 빵이 아주 좋다. 특히 달지 않은 식사용 빵이 일품이다. 프랑스의 바게트, 이탈리아의 치아바타 못지않은 훌륭한 빵을 갖고 있다. 아니, 두 나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걸 일행에게 맛보여주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유럽의 빵 가게는 일찍 연다. 맛있는 빵은 빨리 떨어진다. 새벽같이 눈 비비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 아침잠이 많은 편이지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지런을 떨었다.

독일 빵집, 즉 베커라이(bäckerei)의 하루는 전날 반죽부터 시작한다. 보통 아침 6시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온갖 빵이 있다. 통밀가루나 정제분이나에 따라 빵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제각각이다. 깨나 양귀비씨를 붙인 빵도 보인다. 대체로 다른 나라 빵집에 가면 주로 작고 흰빵을 고른다. 실패가 적어서다. 통밀빵이나 너무 큰 빵은 입에 거칠고 다 먹을 수 없다. 빵을 살 땐 언어가 안 돼도 전혀 문제없다. 유럽 빵집은 한국처럼 빵을 골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열대의 빵을 가리키고 대화가 오간다. 그래서 약간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손가락' 뒤서 어디에 써먹겠는가.

당시 작고 맛있는 흰 빵인 브뢰첸 한 개가 0.5~0.8유로, 통밀빵인 볼콘브로트는 반 덩이에 2~3유로 정도 했던 것 같다. 산 것을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식대로 주문하기도 한다. 브뢰첸을 반으로 갈라 버터를 바르고 소시지나 치즈를 끼워 그 자리에서 먹는 식이다. 거기에 독일식 커피를 한잔 곁들인다. 재밌는 건 최근 독일 동네 빵집들이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잔을 쓴다는 점이다. 원래 독일 커피 문화는 필터로 내린 연한 커피를 주로 마셨는데, 1980~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식 카푸치노와 카페라테가 빵집 메뉴판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빵은 독일식, 커피는 이탈리아식이 대세다.

하기야 여행자인 내가 독일 빵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독일은 3천 종이 넘는 빵을 비롯해 1,200종의 롤빵과 과자 문화를

자랑한다. 이런 빵 문화가 2014년 독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오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아침에 대부분 달콤한 빵을 먹는다. 크루아상 계열이다. 독일은 빵에 버터를 바르기도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처럼 아침에 달콤한 것을 찾기도 한다. 버터가 듬뿍 들어간 크루아상이나 잼을 넣은 페이스트리를 먹기도 한다. 물론 달지 않은 빵에 달콤한 독일식 잼, 꿀을 함께 내는 전통 방식도 눈에 띈다. 여러 나라의 호텔에서 아침으로 이런 달콤한 재료들을 내놓는데, 듣기로는 독일인 관광객이 많아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됐다. 그 덕에 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험을 치르느라 억지로 들었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도 제대로 들어볼 수 있었다. 대표작인 교향곡으로 시작해 유명한 <비창>, <월광>은 물론이고 말년의 세 가지 소나타 또한 클래식의 아름다움과 힘을 전해줬다. 그의 피아노 소나타 중 마지막 32번 작품에 깊게 빠지기도 했다.

베토벤의 식습관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기록이 여럿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건 커피 이야기다. 베토벤은 매일 아침 자기 손으로 커피를 내렸는데, 한 잔에 정확히 원두 60알을 세어 넣었다고 한다. 강박에 가까운 이 습관은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로 자주 인용된다. 빵에 관한 기록은 커피만큼 상세하진 않지만, 마카로니에 치즈를 얹은 요리와 삶은 달걀, 소박한 빵을 즐겼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화려한 만찬보다 단순한 한 끼를 좋아했고,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작곡 중이던 악상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았다고 전해진다. 그를 따라 커피 원두 60알을 골라보니 대략 소박한 커피 한 잔을 내릴 수 있는 무게였다.

언젠가 베토벤의 생가와 활약했던 도시에 가보고 싶다. 아침에 갓 문 연 빵집을 찾아내서 버터를 바르고, 커피도 한잔 같이 마시고 말이다. 32번 소나타를 연주하는 공연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몇 년 배웠다. 지금은 칼럼을 쓰고, 밥을 먹으며 전국을 다닌다.
chanilpark@naver.com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사업장
안전

호우·
태풍

소방
안전

축제·
행사

2026. 9. 1. ~ 2026. 11. 30.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



iOS용 QR코드

안드로이드용 QR코드



말레이시아가 단순한 아세안시장이 아닌 이유

최근 한 달 살기, 영어 교육 등으로 친숙해진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 물류의 핵심국가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중동 등과 연결되는 문화적·지리적 다양성을 가진 나라다. 이런 다양성은 말레이계와 원주민 등을 포함한 부미푸트라계(약 70%), 중국계(약 23%), 인도계(약 7%) 등 민족 구성을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지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첨단산업·서비스 분야에서 교역·투자 확대 중

과거 영국의 통치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중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인력도 많다. 이슬람 교를 연방 종교로 하는 말레이시아는 글로벌이슬람경제

지표(GIET, 전 세계 국가별 이슬람경제 및 할랄산업의 성장세와 생태계 경쟁력을 평가한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할랄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시장은 2030년까지 1,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강점은 지정학적 위치다. 고유의 다양성이 지정학적 위치와 결합해 여러 시장을 연결한다. 과거 동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몰라카해협은 오늘날에도 글로벌 물류의 핵심지다.

말레이시아 면적은 대한민국의 3.3배다. 2025년 기준 인구는 3,420만 명, GDP는 4,722억 달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인당 GDP도 아세안 11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말레이시아의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주요 진출지로는 덜 주목받기도 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경제 규모나 소비 인구 역시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첨단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며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말레이시아 교역 규모는 278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해 역대 최고였다. 지난 1~6월 대말레이시아 수출과 수입은 각각 63.8%, 31.8% 늘어났다. 올 상반기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45.8% 늘어나면서 연간 교역액은 4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5년 양국 교역액은 285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

지난해 6월 24일 이마트24 말레이시아 100호점(코타다만사라점) 내부 전경.
© 이마트24



**지난 61년간 양국 무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54개 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액은 600억
달러 이상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무역적자는 아쉬운 대목일 수
있지만 전략자원 확보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2024~2025년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전체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천연가스 수입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적자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기인한다.**

후 경제성장과 함께 교역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다시 5년 만에 400억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우리 기업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액이 약 6억 달러로, 1985년 이후 누적액은 86억 달러가 넘는다. 말레이시아 제조업 분야 주요 투자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위권이다.

1965~2025년, 지난 61년간 양국 무역 통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7개 연도에서만 흑자를 기록했고 54개 연도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액은 600억 달러 이상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무역적자는 아쉬운 대목일 수 있다. 하지만 대말레이시아 적자는 전략자원 확보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자원 수입처 확보가 한국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적자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 기인한다. 2024년과 2025년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에서 각각 35억4천만 달러와 3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34억6천만 달러와 39억2천만 달러로 전체 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천연가스는 산업과 가정에 필수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까운 위치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가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전략적 자산이다.

팜유도 비슷하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 팜유 생산국으로 글로벌 생산 비중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은 말레이시아에서 4억3천만 달러 규모의 팜유를 수

입했는데, 이는 전체 팜유 수입액의 65%다. 특히 라면을 만들 때 쓰는 팜유의 상당량이 말레이시아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이 15억 달러가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말레이시아산 팜유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 제조에 활용되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양한 민족 공존해 테스트마켓으로서 가치 커...

FTA 발효되면 소비재 등 수출 늘고 협력 확대될 것

1970년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말레이시아에 투자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북서부의 페낭은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거점으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ATP)의 약 13%를 담당한다.

최근 AI 붐으로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2030년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품목 중 40%가 반도체다.

한류에 힘입어 소비재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 5대 소비재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지난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늘었다. 현지 시내 마트, 편의점 등에서 한국 식품, 화장품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최종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흐름과 양국 협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비관세 장벽 및 투자 규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할랄 인증, 유통망, 서비스 협력은 이슬람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국가·지역과 폭넓은 대외 관계를 유지하며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중동 등 다양한 국가·지역과 교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디지털화 수준이 높고 신상품에 대한 수용성도 높다. 다양한 민족의 소비층이 공존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할랄·중화권·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수용 가능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오늘날은 공급망 재편과 시장 다변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말레이시아는 단순한 아세안시장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장, 자원과 기술을 연결해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관문이다. 



문진욱

KOTR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jw2003@kotra.or.kr



세르비아, 공공서비스 AI 혁신의 답 한국에서 찾는다

AI를 공공서비스에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까. 기술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를 모으고, 품질을 관리하며, AI를 믿고 사용할 제도를 갖추는 일이다. 정책을 실제 서비스로 옮길 전문기관과 기업의 역할도 필요하다. 2025~2026년 세르비아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이러한 실행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데서 출발했다.

공공 부문 AI 도입·활용에 의지 보여 온 세르비아, 데이터 활용 관리체계 부재 등 해결 위해 KSP 요청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이하 과기혁신부)는 공공행정 분야에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의 AI 도입과 활용'을 주제로 한국에 정책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추진된 2025~2026년 세르비아 KSP는 현지의 제도와 활용 여건을 분석하고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실행 가능한 공공 부문 AI 도입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르비아는 AI를 공공서비스 혁신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왔다. 지난해 1월 'AI 개발전략(2025~2030)'을 채택해 보건의료와 공공안전과 같은 우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지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시민의 신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KSP 정책자문은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공공 부문 AI의 단계적 도입 전략과 우선 활용 분야 검토다. 기술 도입과 제도 마련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을 살펴보고 현지 여건을 고려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둘째, AI를 활용한 공공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부처인 세르비아 과기혁신부가 국가 R&D의 기획·조정·평가를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례를 참고해 세르비아에 적합한 혁신 모델과 소규모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셋째, 데이터 관리와 품질보증 체계를 검토했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의 제약을 진단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인프라 보완 방향을 도출했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의 사



지난 4월 23일 KSP 연구진이 세부 실태조사를 위해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 차관, 현지 컨설턴트 등과 면담하고 있다.
© 필자 제공

전협의를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세부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등의 단계를 거쳐 올 8월 최종보고회로 마무리됐다. 사전협의와 착수보고회에서는 자문 주제와 우선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세부 실태조사를 통해 세르비아 공공 부문의 AI 활용 여건과 주요 제약 요인, 관련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했다. 지난 5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세르비아 과기혁신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당 부처와 베오그라드대, 공공정책처 소속 고위 정책결정자와 정책실무자 6명이 한국을 찾았다.

대표단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잠정 정책제언을 연구진과 공유·논의했으며, 한국의 공공 AI 거버넌스와 분야별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봄에 세르비아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방문해 데이터 관리, AI 활용, 안전 관리, 민간협력 등 정책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추진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체계와 품질 관리 제도를, 서울AI재단에서는 도시 행정과 AI를 공공업무에 적용한 사례와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에서는 AI 위험 관리와 전담기관의 역할을, LG CNS에서는 교육·법률·조세·안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AI 전

Serbia Korea

한 사업과 민관협력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정책실무자 연수는 데이터 관리, 공공서비스 적용, AI 안전, 민간의 사업 수행 역량 등 한국의 다양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세르비아의 제도와 행정 여건에 비춰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한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르비아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과 실행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KSP 정책제언 반영해 AI 이행·감독 기구 설립 검토, AI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후속 협력 수요도 확인

지난 8월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공공 부문의 AI 도입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제언의 활용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세르비아 측은 시범사업의 확산 경로, 조달 방식, 데이터와 인프라의 준비 수준, 기관 간 역량 격차를 보완할 방안 등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진은 AI를 도입하기에 앞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여건을 점검하고, 영향평가와 품질관리, 보안 기준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사업을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이 실제 제도 논의로 이

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과기혁신부 측은 현재 준비 중인 국가 AI 법안 관련 워킹그룹에서 한국 측 제언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이행과 감독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SP 정책실무자 연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가 참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관 방문에서 얻은 시사점이 세르비아의 제도와 조직 구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사업 관계자들은 AI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과 학계의 역량을 공공 부문의 수요와 연결하는 산학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후속 협력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세르비아 측은 국가 AI 법안 관련 제도 개선과 AI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유관 분야의 정책자문을 차기 KSP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보고회와 후속 면담에서도 공공행정 AI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이번 KSP가 일회성 정책제언을 넘어 세르비아의 제도 개선과 후속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KSP가 정책자문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자문을 통해 협력국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파악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례를 함께 공유해 후속 협력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세르비아 KSP 사업에서도 협력국은 정책 실행에 필요한 민간의 역량과 사업 수행 경험을 접했고, 한국 기업은 현지의 정책 수요와 제도적 여건을 이해할 기회를 얻었다. LG CNS 방문 역시 이러한 상호 이해의 접점을 마련한 사례다.

향후에는 KSP 정책자문을 통해 확인된 협력 수요를 적용 분야와 필요한 기술, 데이터 여건에 따라 구체화하고, 이에 적합한 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후속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세르비아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한국 기관·기업의 협력 기회 확대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민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연구원
jimin@kdi.re.kr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있는 베오그라드대 화학·기술·금융혁신연구소(HTM) 건물.
벽화는 밀루틴 스테파노비치 등 세르비아 화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 © 필자 제공



빙하가 무너진 날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조금씩 바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난 8월 26일 히말라야산맥의 빙하가 무너져 산 아래 강줄기를 따라 마을을 휩쓴 재난의 한복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평생 그 공포를 잊지 못할 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자기만 살아남았다면 공포에 죄책감까지 더해져 남은 삶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다.

만약 생존자의 기억 가운데 재난의 생생한 기억만 골라내 삭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기억을 지운다고 한들 재난의 흔적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삭제된 기억의 자리에 무미건조한 정보만 채워 넣는다면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오디세이>로 한국에서만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2010)처럼 타인의 머릿속을 조작하는 일이 지금 세계 곳곳의 실험실에서 진행 중이다. 놀랍게도 <인셉션>이 나오기 직전인 2009년부터 그 성과도 나왔다.

기억을 지우고 켜고 덮칠하다

가장 먼저 기억 조작의 문을 연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대의 시나 조슬린(Sheena Josselyn) 팀이다. 조슬린 팀은 뇌의 편도체에 주목했다. 편도체는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이 묻어 있는 경험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뇌의 한 부분이다. 이곳이 손상되면 공포나 불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조슬린 팀은 쥐의 편도체 신경 세포 일부의 유전자를 조작해 외부 자극에 좀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만약 그 쥐가 공포스럽게 기억할 만한 상황에 직면한

다면 다른 신경 세포보다 이 유전자를 조작한 세포가 우선 반응할 것이다. 공포 기억 형성에 일차적으로 관여하는 세포를 가려낼 수 있도록 태그를 붙인 셈이다.

이어서 연구진은 그 쥐에게 공포 기억을 심었다. 쥐를 낮선 상자에 넣고 특정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미세한 전기 충격을 주는 방법이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 쥐는 전기 충격이 없어도 그 소리만 들으면 얼어붙는다.

여기서부터 기막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슬린 팀은 태그를 붙여 둔 신경 세포, 즉 공포 기억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세포만 미리 준비해 둔 방법으로 제거했다. 그러자 쥐는 그 공포를 유발한 소리를 들어도 더는 얼어붙지 않았다. 공포 기억이 뇌에서 지워진 것이다.

조슬린 팀의 연구 결과에 고무된 MIT의 야심만만한 2030 과학자 스티브 라미레스(Steve Ramirez)와 쉬류(Xu Liu)는 기억을 지우는 대신 원할 때 불러내는 일, 즉 기억 '켜기'에 도전했다. 이들 역시 쥐에게 공포 기억을 심었다. 그 공포 기억이 일차적으로 저장되리라 짐작되는 뇌의 해마에 있는 신경 세포에 모종의 태그도 달아놓았다.

그렇게 공포 기억을 심은 쥐를 안전한 상자로 옮겼다. 그 상자에는 쥐를 겁에 질리게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당연히 쥐도 평소처럼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이들은 태그를 달아놓은 해마의 신경 세포에 자극을 줘서 활성화했다. 자극을 줄 때 쓰는 방법이 빛을 쏘이는 일이기에 '컨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와 흡사하다.

공포 기억이 들어 있는 신경 세포를 켜자마자 쥐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공포 기억을 강제로 켜자 그 기억이 쥐를 사로잡았다. 둘은 같은 실험을 수차례 반복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

고, 연구 결과는 2012년 『네이처』에 발표됐다. 특정 기억을 삭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켜는 일도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기억을 통째로 지우는 대신 그 기억에 묻어 있는 공포, 후회,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덜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부정적 기억이 일어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전에는 한번 뇌에 새겨진 기억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 멀어지는 것은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거나 새 기억에 밀려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런 식이라면 부정적 기억을 다루는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지워지도록 유도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연구가 거듭되면서 우리 기억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과거의 부정적 기억은 생각보다 끈질기게 뇌에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지나면 그 날카로움이 무뎠을까?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잠시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저장된다(재공고화). 그런데 기억을 떠올리는 상황은 매번 다르다.

전쟁과 같은 혹독한 경험을 치렀던 어르신이 오랜 시간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자녀나 손자에게 그 기억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 애초 경험할 때의 끔찍함은 덜어지고 생활 감각에서 비롯된 여유가 덧붙는다. ('혹독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의 기억은 처음보다 훨씬 부정적 감각이 덜어진 상태로 매번 다시 기록된다.

과학자들은 (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 원리를 적용해 봤다. 전기 충격으로 공포 기억을 심은 피험자에게 이튿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10분 뒤 충격 없는 안전한 경험을 거듭 덧붙였다. 그러자 공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효과는 1년 뒤까지 이어졌다. 기억에서 부정적 감정을

덜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기억 조작이 덜어버리는 것들

지금쯤 눈살을 찌푸리는 독자도 있겠다. 하다 하다 이제 기억까지 조작하다니! 이런 연구를 옹호하는 과학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처럼 부정적 기억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감당하기 싫은 기억을 회피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더구나 트라우마를 유발한 폭력이나 재난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대신, 오직 개인의 뇌 신경망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번 빙하 붕괴 재난의 생존자를 다시 떠올려 보자. 만약 그가 알약 하나로 그날의 생생한 공포와 상실감을 깨끗이 지워낼 수 있다면 개인의 고통은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연대가 자라날 수 있을까? 기억은 단순한 뇌 속의 신경 회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고통의 기억을 완벽히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세상은 어쩌면 인간의 정체성까지 조작하는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다. ㉞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imtyio@gmail.com

세계로봇대회 개최한 중국에서 피지컬 AI의 현실을 확인하다

지난 8월 19일, 중국에서 로봇을 둘러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상하이 증시에 로봇기업 유니트리가 상장했고, 베이징에서는 세계로봇대회(WRC)가 개막했다. 바로 그 직전 주에 필자는 중국 선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조종했고, 운전자 없는 택시를 탔고, 드론이 배달해 준 점심을 먹었다. 지난 3월호에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오는 AI를 소개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그 로봇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기회였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시 기술·창업 전용 주식시장(커창반)에 상장한 유니트리의 공모가는 한 주에 150.8위안이었다. 첫날 460% 오른 845위안에 마감했고 장중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87조 원까지 갔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12조 원대였으니 장종한때 약 일곱 배까지 났던 것이다. 청약 당첨률은 0.018%로 커창반 사상 최저였으며, 신청서 접수로부터 상장까지 다섯 달이라는 최단 기록도 커창반 사전심사 제도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기술 기업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길목을 국가가 계속 넓혀주고 있다는 의미였다.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유니트리 창업자 본인이었다. 상장 다음 날 열린 세계로봇대회 기조연설에서 창업자 왕싱싱 대표는 “구현지능(피지컬 AI를 중국에서 부르는 말)의 챗GPT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에 로봇을 데려다 놓고 말로만 지시했을 때 일의 80% 정도를 해내는 수준으로, 빠르면 2~3년 늦으면 5~10년 걸릴 수 있다고 봤다. 그가 병목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었다. 통제된 환경에서는 성공률이 거의 100%인데 물건 위치가 몇 센티미터만 달라져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유니트리의 매출 구조 역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1~3분기 기준,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매출의 73.6%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나왔고, 산업 현장의 비중은 9%대다. 이후 주가는 계속 떨어져 9

월 초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시장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가 아닌 실행에 값을 매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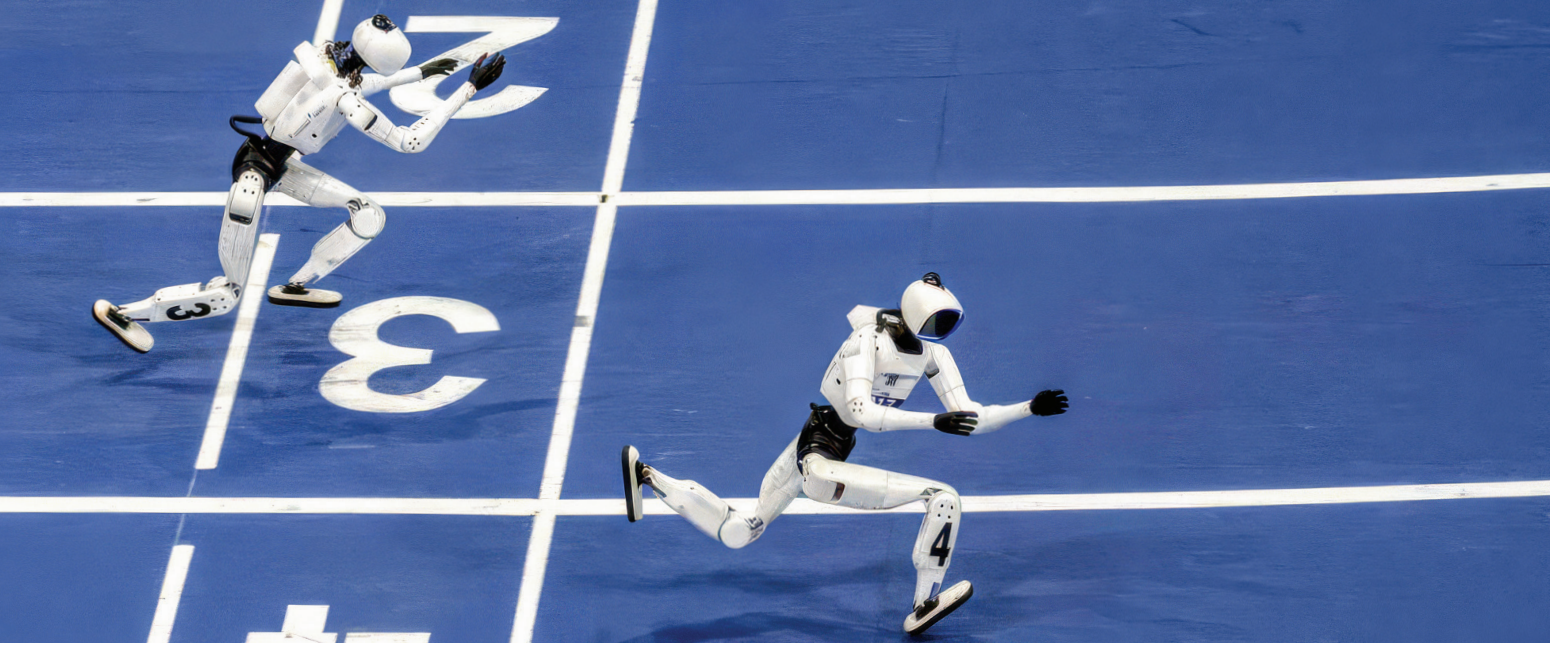
1년 만에 기록을 절반으로 단축한 중국 팀 로봇

세계로봇대회 직후에 열린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는 지난해의 네 배 규모인 16개국 666개 팀, 로봇 2천여 대가 참가했다. 중국 팀 로봇은 예선에서 100m를 9초39로 달리더니, 대회 최종 기록은 8초64까지 내려갔다. 우사인 볼트가 기록한 9초58보다 빠르지만 실내 트랙이고 공인 기록도 아니며, 대회를 앞두고 다리를 10cm 늘린 로봇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눈여겨볼 숫자는 바로 지난해 대회의 기록이다. 지난해 100m 최고 기록은 21초50이었다. 1년 만에 기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제자리 높이 뛰기 기록도 0.96m에서 3.40m가 됐다. 올해부터 평지 달리기는 원격조종이 금지돼 완전 자율로만 겨뤘는데도 그렇다.

여전히 훈련 중 감속하지 못해 벽에 부딪힌 로봇이나 서츠를 깨다 실패한 로봇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완성도가 아닌 개선 속도이고, 그 속도를 만드는 것은 현장에 깔린 로봇의 숫자다. 올 상반기 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9,100대 가운데 97%가 중국산이었다. 9월 초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휴머노이드를 무대에 올렸다.

필자가 선전에서 본 로봇은 실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일상에 있었다. 숙소 앞에서 탄 자율주행 택시의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었다. 신호에 걸리자 차 안 화면에는 카운트다운이 떴고,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출발했다. 차와 도시의 신호체계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운영사는 올해 2월 선전에서 차량 한 대 기준 손익분기를 넘겼고, 로봇 택시 100대를 세 명이 운용한다고 했다. 점심은 드론이 가져다줬다. 공원 한가운데 있는 수령함까지 3km를 15분 만에 왔고 추가 요금은 없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서버



지난 8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100m 달리기 경기 중 로봇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를 드론 배달이 아니라 저고도 항공망이라고 부른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텔에서 야식을 시켰을 때다. 배달 로봇이 1층에서 음식을 받아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불러서 타고 방 앞까지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봇의 성능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통신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배달 로봇이 잘 확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엘리베이터 회사와 건물 관리 주체, 로봇 회사가 따로 움직이면 로봇은 1층 로비에서 멈춘다. 기술이 아니라 표준과 인프라의 문제다.

그들도 함께 봤다. 낮에 도심을 지나는데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위반 차량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만 해도 번호판과 차체, 운전자 얼굴을 한 장에 담은 촬영용 보조광이었다. 로보택시가 그렇게 잘 달리는 데는 도시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조건도 작용한다. 편리함과 효율을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데이터를 모아도 되는가. 그 선은 누가 정하는가. 중국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곧 답해야 할 질문이다.

로봇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데이터, 부품, 사람

우리의 현실을 보자. 2024년 기준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1,220대로, 로봇 밀도 세계 1위다. 그런데 한국의 핵심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아직 40%대다.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정작 그 부품은 밖에 기대고 있다. 중국 역시 첨단 핵심부품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적지 않지만, 중급 부품 분야에서는 국산화율이 80~90%까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되며 해외시장도 넘보고 있다. 필자가 선전에서 탔던 그 로보택시 회사가 8월 말 국내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부터 200대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 9월 초 공개된 2027년 예산안에서 로봇 예산의 무게중심이 연구개발(R&D)에서 구매와 실증, 양산 지원으로 옮겨갔다. 국산 휴머노이드 200대를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 사업과 국가 제

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이 새로 잡혔다. 기업도 9월 초 삼성전자가 개발 진용을 갖춰 CES 2027 공개를 목표로 잡았고, 두산로보틱스는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실증 계획을 내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아틀라스를 포함한 로봇을 연 3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CJ대한통운은 물류업계 최초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물류센터 운영 공정에 투입했다. 물류 작업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피킹·분류·검수·포장 등으로 휴머노이드 적용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세 가지를 보태고 싶다. 첫째는 데이터다. 로봇이 일하게 될 곳은 최첨단 생산라인만이 아니라 동네 용접 공장과 급식실 그리고 작은 물류창고이고, 그 현장 하나하나가 로봇에게는 처음 보는 환경이다. 업종별 작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모으는 일은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렵고 정부가 할 수 있다. 둘째는 부품이다. 없으면 안 되는 길목을 잡되, 중국산이 물량을 쏟아내는 만큼 가격보다 정밀도와 내구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셋째는 사람이다. AI가 코딩을 대신해 주면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병목은 풀리고 있고, 남은 병목은 모터를 만지고 감속기를 조립하며 기계를 뜯어 원인을 찾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다. 하얼빈공업대 선전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로봇을 손으로 직접 만져가며 배우는 모습이 가장 부러웠다.

앞으로 로봇 뉴스를 볼 때 기준 하나를 바꿔보길 권한다. 몇 대 팔렸나보단 어느 현장에서 몇 시간 일했다는 소식을 찾아보는 것이다. 가동 시간은 로봇이 제 값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 번 써본 공장이 두 번째 주문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시작일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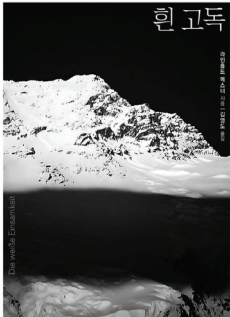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AI 2026 트렌드 & 활용백과』 저자
kimdukjin@itcl.kr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만나는 고독



검은 고독

흰 고독



라인홀트 메스너

라인홀트 메스너,
『검은 고독 흰 고독』

여행이 길어지면 누구나 그 방에 들어선다. 고독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는 방. 중앙아시아를 떠돌던 어느 해, 투르크메니스탄 통과 비자를 받지 못해 발이 묶였다. 그 나라를 지나 제3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닷새만 머물게 해주는, 인색하고 까다로운 비자였다. 관청 문턱을 몇 번이나 넘나들었는지 모른다. 겨우 비자를 받아 든 날,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숙소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여행이 이토록 고단한 일이라니.

숙소에 들어서자 외로움이 마중 나왔다. 빈방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누엿혔다. 곁에는 아무도 없고, 탁자엔 어제 마시다 만 콜라 한 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 아닐까? 제 발로 집을 떠나 사서 하는 이 고생이 웬 말인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침대 끝에 걸터앉아 돌아가는 길을 그려봤다. 정해진 날짜도, 끊어둔 비행기표도 없는 여행이었다. 마



여행 중 잠시 몸을 누였던 낯선 도시의 호텔방.
이름난 호텔이든 저렴한 게스트 하우스든 빈방의 고독은 매한가지다.

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집을 싸 한국행 표를 끊으면 그 만이었다. 종종 하던 상상. 그 상상은 그날만의 것도 아니 었다. 즐겁고 흥겨운 날에도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하루도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 떠돌고 싶은 마음과 집이 그리운 마음, 그 둘이 쌍둥이처럼 내 안에 함께 있었다. 텅 빈 방은 두 마음 이 정면으로 마주 앉는 자리였다.

외로움은 허기를 불러오곤 했다. 칙칙한 방을 벗어날 핑계 삼아 가까이서 군것질이라도 할 생각으로 방을 나서 며 카메라를 집어 들었다. 그 순간 누가 내 뒷머리카락을 확 잡아챘다. 등골이 서늘했다. 방엔 분명 아무도 없었는 데, 돌아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다. 나를 당긴 건 어깨에 멘 카메라 끈이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카메라 끈에 당 겨진 것이었다. 헛웃음이 났다. 외로움은 제 머리카락에 도 기겁을 하게 만드네. 이렇게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었 다. 여행이 이만큼 길었구나. 떠나를 때 챙긴 옷가지는 대

부분 낚아서 버렸으니 몸에 걸친 건 전부 여행지에서 산 것들이었다. 비누는 몇 개째며, 손톱은 또 몇 번이나 깎았 던가. 긴 시간을 혼자서 여행했으니 외로움이 비집고 들 자리는 넉넉했다.

세계 최초 히말라야 8천m급 고봉 열넷을 오른 메스너… 자신을 갉아먹는 고독과 채우는 고독에 이름 붙인 책

검은 고독, 흰 고독. 여행에서 수없이 겪고도 좀처럼 이름 붙이지 못한 야릇한 감정에 라인홀트 메스너가 붙인 이름 이다. 그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의 8천 미터급 고봉 열 넷을 모두 오른, 살아 있는 등반의 역사다. 그의 책 『검은 고독 흰 고독』에는 나의 빈방과는 비교도 안 될 무시무시 한 고독이 가득 들어차 있다. 에베레스트를 인류 최초로 무산소 등정하고 찬사가 채 식기도 전, 그는 6주 만에 다 시 배낭을 멘다. 고작 15킬로그램짜리. 목적지는 낭가파 르바트. 세르파도 파트너도 산소통도 없이 단독 등반으

로. 8년 전 눈사태가 동생 권터를 삼킨, 그에게는 운명의 산이었다. 왜 하필 그 산이었을까. 동생을 잃은 자리로 혼자 되돌아가는 일은 애도 같기도 하고 형벌 같기도 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동안 그는 다시 짐을 꾸렸다. 의지할 것을 하나씩 덜어내고 끝내 제 몸 하나만 남기는 방식으로. 오래 떠돈 여행자도 그 감각을 조금은 안다. 짐이 줄수록 외려 여행이 또렷해지던 순간들을.

단독 등반은 누가 대신 짐을 들어주지도, 앞서 길을 터주지도 않는다. 높이 오를수록 고독은 짙어진다. 길이 끊어지고, 산소가 모자라 환상과 현실이 뒤엉키고, 죽음이 다가와 어깨동무를 한다. 혼자라는 사실이 사람을 갇아먹는 것이다. 메스너는 이것을 검은 고독이라 불렀다. 그런데 책 속에서 그 고독이 어느 순간 빛깔을 바꾼다. 똑같이 혼자인데,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 되는 순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떠받치고, 도리어 더 큰 무언가와 하나가 되게 한다. 그것이 흰 고독이다. 같은 고독이, 하나는 사람을 부수고 하나는 사람을 채운다.

“고요에 이끌려 나는 슬며시 정상을 만진다. 나와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르다.”

정상과 하나가 됐다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그는 끝내 무언가와 하나가 됐구나. 돌이켜 보면 내 빈방이 그토록 검었던 건, 거기서 나는 무엇과도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떠나 있

고 싶다는 마음이 한 몸 안에서 밤새 서로를 물어뜯었으니. 똑같은 고독이 그에게는 하나됨이었고, 내게는 갈라짐이었다. 메스너는 그 합일을 좇아 닿을 수 없는 곳을 스스로 올라갔고, 나는 빈방에서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선택한 고독과 밀려든 고독.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지던 자리들이 있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나를 갇는 대신 채우던 자리들. 하나는 카자흐스탄의 텐산산맥이었다.

텐산산맥 깊숙한 곳 해발 3,500미터의 산장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나를 가득 채웠다

중앙아시아에 넓게 펼쳐진 텐산산맥 깊숙한 곳, 해발 3,500미터에 산장이 하나 있다. 차는 산 중턱까지만 올 수 있었다. 거기서부터 하루를 꼬박 눈을 헤치고 올라야 닿는 집. 해가 뉘엿해질 무렵에야 겨우 문 앞에 섰다. 살림이라곤 사는 데 꼭 필요한 것만 갖춘 집이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본 순간, 하루치 피로가 싹 가셨다. 검붉은 바위산과 흰 눈과 하늘. 세상이 딱 세 가지로만 이뤄져 있었다. 그 드넓은 산역(山域)에 사람 사는 지붕이라곤 등 뒤의 산장 하나뿐이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문명의 흔적은 눈에 단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 전깃줄도 길도 먼 불빛도 없었다. 거기서 사흘을 묵었다. 일행이 둘 있었지만 그 흰 적막 속에서는 저마다 가 혼자였다.

밤이 되자 기운이 곤두박질쳤고 하늘에는 별이 미어지게 돌았다. 고도 탓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숨이 찼고 침낭 속에서 발가락을 아무리 비벼도 온기가 돌지 않았

텐산산맥 해발 3,500미터. 그 드넓은 산역에 사람의 지붕이라곤 이 산장 하나뿐. 사방 어디에도 문명의 흔적은 없었다.





밑으로 허공이 수백 미터씩 깊어져 갔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정작 벽에 붙어서는 자기 자신 뿐이었다.



여행 중 잠시 몸을 쉬었던 낯선 도시의 호텔방.
이름난 호텔이든 저렴한 게스트 하우스든 빈방의 고독은 마찬가지다.

다. 그 추운 어둠 속으로, 멀리 바람이 산의 벽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만 이따금 들려왔다. 지구가 갓 태어났을 무렵의 밤도 이런 소리였을까. 이상한 일이었다. 빈방에서 나를 감아먹던 바로 그 혼자라는 사실이 여기에선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 된다면 메스너의 말을 그 밤에 몸으로 알아들었다. 혼자 있음의 환희라니.

흰 고독의 정체를 한 번 더 배운 건 뜻밖에도 사람들 한가운데서였다. 미국 요세미티의 엘 캐피탄. 900미터 수직 화강암 벽으로, 세계의 클라이머들이 성지로 떠받드는 바위다. 암벽에 입문한 지는 오래지만 실력이 여태 초보를 못 벗어난 나로서는 혼자라면 근처에도 못 갈 곳이었다. 내 밀친을 뻔히 아는 노련한 선배들이 원정대에 끼워준 덕에 겨우 바위 앞에 섰다.

고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세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앞에 서는 일

등반은 애초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서로의 몸을 자일로 묶고, 앞선 이가 로프를 걸어주고, 아래에서 확보를 봐준다. 우리가 오르려는 벽은 로프 길이에 맞춰 열세 번을

끊어 올라야 했고, 중간에 내려올 섯길이 없어 한번 붙으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새벽 어스름에 헤드랜턴을 밝히고 바위 밑동에 붙었다. 바위가 갈라진 틈에 손을 밀어넣어 몸을 끌어올렸고, 손가락 한 마디만 한 돌기에 발끝을 얹고 일어섰다. 발밑으로 허공이 수백 미터씩 깊어져 갔다. 겁 많은 나는 수없이 얼어붙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사실이 점점 뚜렷해졌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이 벽에는 나뿐이라는 것. 줄은 추락을 받아줄 뿐 이 한 뼘을 오르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았다. 얼어붙은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도, 끝내 다음 손잡이를 붙드는 것도 오직 나였다. 밤이 돼야야 땅을 다시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벅찼다. 거대한 벽을 함께 오른 일행이 있었어도 나는 온종일 완전하게 혼자였다.

메스너의 책을 다시 읽을 때 흰 고독이 조금 달리 읽혔다. 고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세는 일이 아니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앞에 서는 일이었다. 메스너는 셰르파도 파트너도 로프도 없이 그 고독을 통째로 살았고, 나는 자일에 묶인 채 그 한 조각을 훔쳐 배웠다. 그의 것에 대면 부스스거렸겠지만 곁은 같은 것이라 믿는다. 검은 고독은 빈방으로 밀려드는 것이었다. 흰 고독은 그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만나는 것이었다. ㉞



박 로드리고 세희 촬영감독
영화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
맹렬하게 여행하고 틈틈이 글을 쓴다.
filmrodrigo@naver.com

머신 이코노미 시대 필수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정보를 탐색·비교·협상하고 즉시 결제까지 완결하는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 혹은 머신 이코노미(Machine Economy)가 이제 실험 단계를 지나 상용 인프라 경쟁 단계로 진입했다. 실제로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주도하고 구글·AWS·앤스로픽 등이 채택한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x402'는 올해 들어 누적 처리 건수 1억6,500만 건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99%가 달러 스테이블코인(USDC)으로 정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되며 다음 네 가지 속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담보되는 가치 안정성,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수 초 내에 완결되는 실시간 초고속 정산, 카드 수수료 대비 수십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초저비용 거래 처리 능력, 국경과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글로벌 호환성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디지털경제의 기본 화폐이자 토큰증권·실물연계자산(RWA: Real World Asset) 시장을 완성하는 필수 인프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발행 주체를 둘러싼 지분 다툼, 만기 3개월 이내 국고채가 전체 국채의 1.8%에 불과할 만큼 부실한 단기국채시장, 예금 이탈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를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신중론 등 이해관계의 충돌로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미국이 일명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결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결제 표준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원화의 통화주권과 국내 핀테크산업의 성장 동력이 함께 잠식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의 안정과 혁신을 함께 담는 정교한 설계다. 첫째, 발행 주체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누가 발행하든 지켜야 할 최소 규율을 먼저 세워야 한다. 준비자산의 100% 이상 분리 보관과 외부 감사 실시, 실시간 공시 의무화, 예금 대체를 막기 위해 이자 지급과 스테이킹을 명확히 금지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결제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민간과 중앙은행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규율 아래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 혁신과 마이크로페이먼트(소액결제시스템) 시장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매형·목적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최종 정산과 상호 운용성의 기준을 중앙은행이 뒷받침하도록 한다. 이는 통화정책 유효성 우려와 혁신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점이 된다.

셋째, 단기금융시장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만기 3개월에서 1년 수준의 단기 국고채를 정례 발행하고, 발행한도 산정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발행자들이 준비금을 국내 우량자산으로 구성할 실질적 경로를 열어야 한다.

넷째, 처음부터 글로벌 호환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x402나 CPN(Circle Payments Network)과 같이 이미 확산 중인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및 해외 금융 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API와 기술 표준을 갖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갇힌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정산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 가상자산이 아니라 화폐가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남는지를 가르는 통화주권의 시험대다. '허용할 것인가'라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관리할 것인가'로 신속히 전환해야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영토와 미래 화폐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디지털 금융의 영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편되고 있다. 그 영토를 지키고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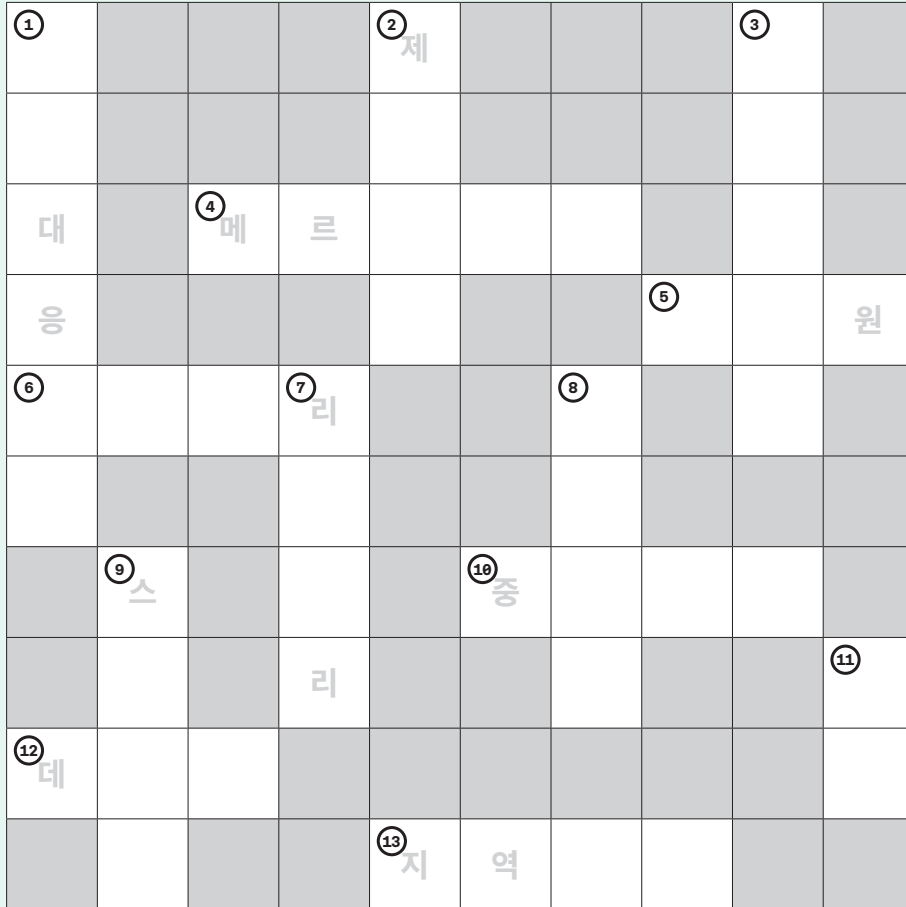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낱말퍼즐

시사·경제 용어를 낱말 풀이 형식으로 익혀 보세요.

이달의 『나라경제』를 열심히 읽은 독자라면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을 문제들입니다.



가로퍼즐

- ④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이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
- ⑤ 원래 고시생들이 머물던 공간이지만, 오늘날에는 주거취약계층의 대표적인 비주택 거처로 꼽힌다.
- 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기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정책금리. 이것이 오르면 대체로 시중의 예금·대출 금리도 오른다.
- ⑩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우리나라에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⑫ AI 학습의 핵심자원. 지난해 통계청은 이것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처'로 확대·개편됐다.
- ⑬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세로퍼즐

- ①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적립해 청년·지방·미래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기금.
- ② 특정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 ③ 쿠알라룸푸르가 수도이며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지난해 한국과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 ⑦ '회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우나·마사지·숙면 등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쓰는 소비 현상을 '○○○○노믹스'라고 한다.
- ⑧ 폭염·가뭄·홍수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 '기후변화'보다 심각성과 긴급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 ⑨ 미국 달러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든 가상자산. 해외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코인.
- ⑪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을 뜻하는 말. 식품에서 이 인증 마크를 쉽게 볼 수 있다.

· 10월 22일까지 kdi_nara@naver.com 혹은 『나라경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으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해
커피쿠폰(1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29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ara_kdi

blog.naver.com/kdi_nara

**“Someone’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Warren Buffett
워런 버핏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재정투자가 훗날 누군가의 그늘이 되기를 기대하며, 2027년 나라살림을 들여다봅니다.